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국책연구기관, KINU

연례정세보고서 2023

2024 한반도 정세 전망



연례정세보고서 2023

2024 한반도 정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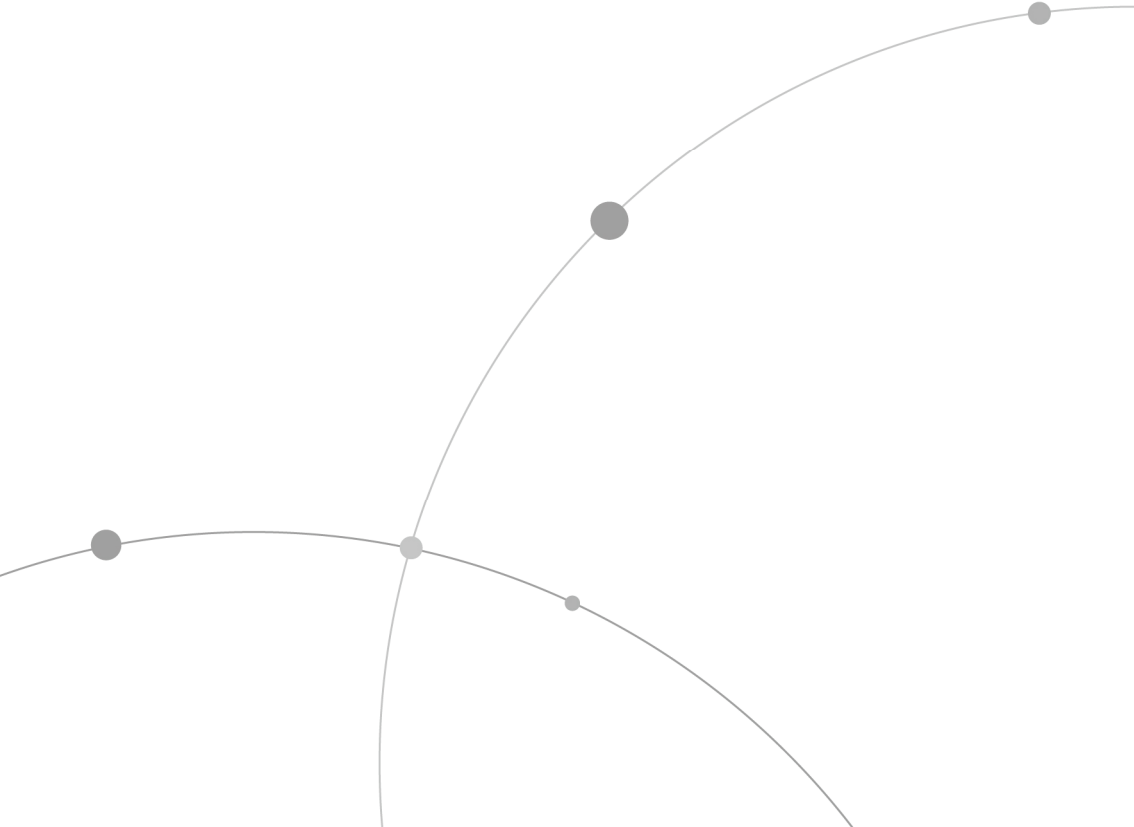
2024 한반도 정세 전망

발행일	2023년 12월 31일
저자	통일연구원 편
발행인	김천식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기획조정실 기획성과팀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8
홈페이지	https://www.kinu.or.kr
기획·디자인	세일포커스(주)(02-2275-6894)
인쇄처	세일포커스(주)(02-2275-6894)
ISBN	979-11-6589-151-0 93340
가격	비매품

© 통일연구원, 2023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2024 한반도 정세 전망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24
한반도 정세 전망



CONTENTS

I. 북한 비핵화 대화 재개 가능성	1
1. 2023년 정세 평가	3
2. 2024년 전망	8
3. 정책 제언	16
II.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중 전략경쟁	23
1. 2023년 정세 평가	25
2. 2024년 전망	29
3. 정책 제언	33
III. 러·북 밀착과 중·러·북 연대 가능성 전망	37
1. 2023년 정세 평가	39
2. 2024년 전망	44
3. 정책 제언	48
IV.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김정은 통치전략	51
1. 2023년 정세 평가	53
2. 2024년 전망	56
V. 북한 대외 및 대남전략	73
1. 2023년 정세 평가	75
2. 2024년 전망	79
3. 정책 제언	87

VI. 북한 경제의 대내외 여건 평가와 전망	91
1. 2023년 정세 평가	93
2. 2024년 전망	97
3. 정책 제언	103
VII. 북한 인권 실태와 개선 전망	105
1. 2023년 정세 평가	107
2. 2024년 전망	111
3. 정책 제언	116
VIII. 남북관계 정상화 가능성	119
1. 2023년 정세 평가	121
2. 2024년 전망	125
3. 정책 제언	129
최근 발간자료 안내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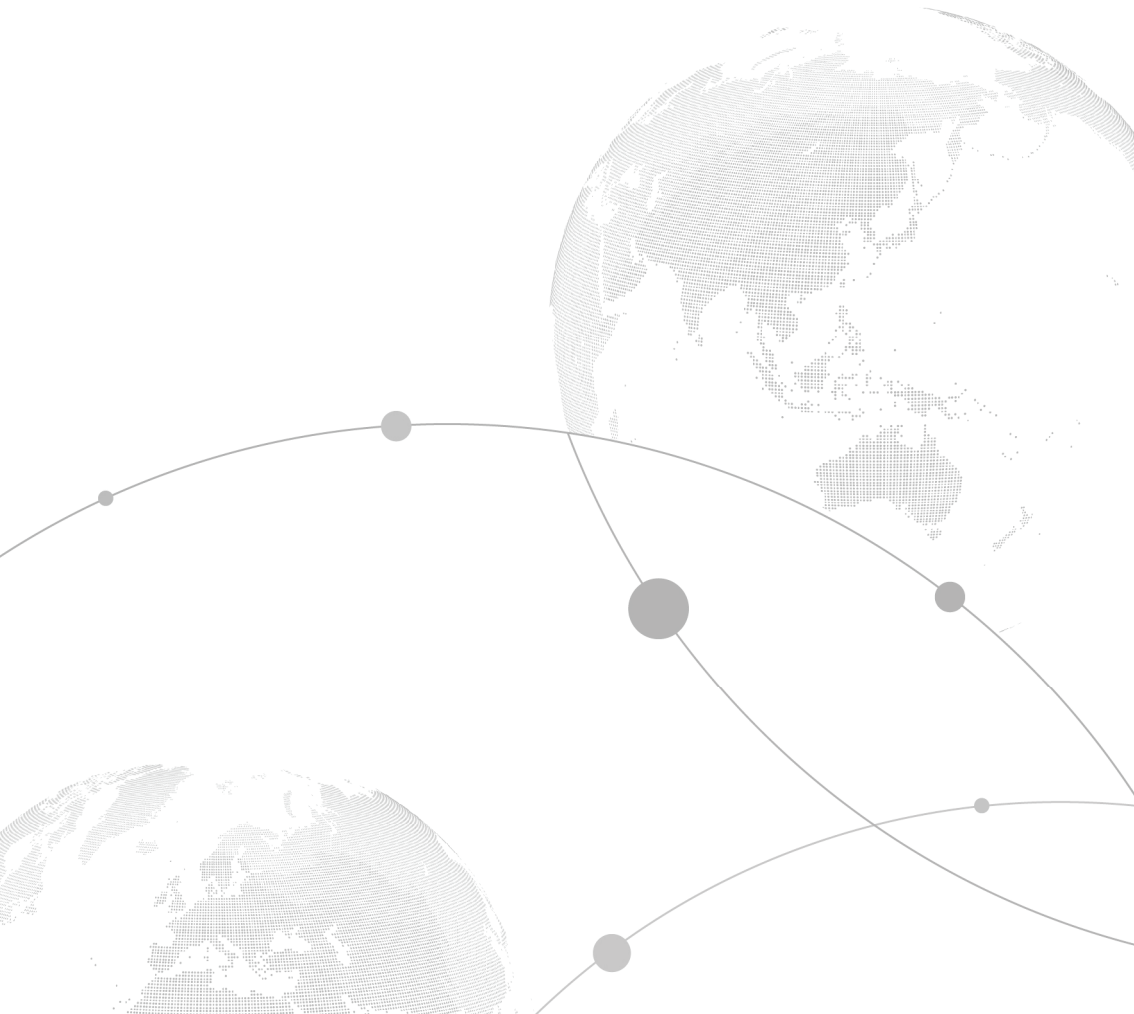
표 차례

〈표 IV-1〉 2024년 한반도 및 세계 주요 정치·군사 일정	56
〈표 IV-2〉 김정은 집권 이후 역대 열병식 개최 동향	61
〈표 VII-1〉 2016년 이후 이산가족 등록 현황	109
〈표 VII-2〉 등록 이산가족 생존자 현황	110

— 그림 차례

〈그림 Ⅰ-1〉 2023·2024년 북핵 정세 결정 요소	8
〈그림 Ⅰ-2〉 북핵 정세의 거시적 전개 방향	9
〈그림 Ⅳ-1〉 2023년 제8기 제6차 당중앙위 전원회의 제시 과업과 수행 결과	53
〈그림 Ⅳ-2〉 김정은 집권 이후 공개활동 추이	63
〈그림 Ⅳ-3〉 김정은 집권 이후 현지지도, 군사부문, 경기 관람 등 활동 추이	64
〈그림 Ⅳ-4〉 김정은 집권 이후 핵·미사일 활동 건수와 참관 건수	64
〈그림 Ⅳ-5〉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부문 현지지도와 고위엘리트 현지요해 추이	66
〈그림 Ⅳ-6〉 김정은 집권 이후 공개활동 미식별 최장기간	66
〈그림 Ⅳ-7〉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 주요 과업 진행 상황	67
〈그림 Ⅳ-8〉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별 개발 및 실전화 공개 양상	68
〈그림 Ⅵ-1〉 북한의 대중무역(분기별)	93
〈그림 Ⅵ-2〉 시장 쌀가격(월별)	93
〈그림 Ⅵ-3〉 김정은 정권의 곡물생산량 추이	95
〈그림 Ⅵ-4〉 제재 강화 이후 북한의 산업별 실질GDP 변화	97

I. 북한 비핵화 대화 재개 가능성



1. 2023년 정세 평가

가. 한반도 정세 결정 요소

2023년 북핵 정세는 역동적이었다. 정세 역동성의 발원지는 강대국의 전략적 행보였으며, 이를 견인한 행위자는 한국과 북한이었다. 정세에 미친 요소들은 다양했지만 행위자, 환경, 구조 차원의 3가지 요소가 정세에 지배적 영향을 미쳤다.

북한의 핵 도발 양상과 특징

2023년 북핵 정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도발이었다. 북한은 2023년 총 28차례 도발을 강행했다.¹ 이중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Short Range Ballistic Missile: SRBM), 순항미사일, 전술유도탄, 극초음속미사일, 수중 드론 등의 도발이 무려 23회였다. 또한 북한은 2023년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nter 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시험 도발을 연간 기준 최다인 무려 5회나 했다. 북한은 사실상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리고 하고자 하는 도발을 모두 강행했다. 따라서 2023년은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와 강도로 한·미·일 3국에 대한 핵 위협을 높였던 한 해로 평가할 수 있다.²

2023년 지속된 북한의 핵 고도화와 핵 강압(coercion)의 키워드

1 2023년 12월 18일 기준.

2 북한은 3월 19일 단거리탄도미사일(KN-23) 발사 도발을 아예 노골적으로 '전술핵 발사훈련'이라고 강조한 바도 있다.

는 질과 양, 공포와 지위 등 4가지이다. 북한은 2023년에도 핵 탑재 어뢰(수중 드론), 신형 고체 추진 ICBM(화성-18형),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포함해 핵무기 체계의 고도화를 진전시켰다.³ 아울러 김정은은 2차례나 직접 기하급수적으로 핵무기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제한된 핵물질 생산량과 보유량을 고려할 때 이는 우리를 직접 겨냥하는 전술핵 대량 생산을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북한은 2023년 핵 어뢰와 핵탄두 공중 폭발 실험을 언급하며 우리에게 대한 공포감 조성에 주력했다. 이는 북한 정부가 오랫동안 핵무기를 동족을 향해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왔던 점이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아울러 9월에는 “핵무력 지위와 핵무력건설에 관한 활동원칙”을 헌법에 명기함으로써,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위한 내부 제도적 절차를 사실상 완료했다.

국제적 환경

우선 국제정치 이슈가 한반도 정세의 전략 환경 요소로 부각되었다. 동유럽과 중동의 지정학적 분쟁과 대만 문제 등에서 미국을 비롯한 현상 유지 세력과 중국-러시아 중심의 현상 타파 세력 간 경합이 가속화되었다. 이는 한반도에 대한 강대국들의 전략적 행보뿐 아니라 우리와 북한의 전략적 선택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新냉전적 질서 형성을 추동했다. 김정은 스스로 2023년 6

3 북한은 2023년 새로운 고체연료 기반 ICBM인 화성 18형 시험 도발을 4월 18일, 7월 12일 두 차례 단행했으며, 북한이 12월 18일 시험 도발했던 ICBM도 화성 18형일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북한은 새로운 무기체계인 핵 어뢰는 총 3차례 시험 도발을 강행했다.

월 전원회의에서 “시시각각 변화되는 상황에 예민하고 기민하게 반응·대응하며 조선(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주력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 북한은 중·러와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정세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러·북 군사협력 모멘텀이 부각되었고, 북한이 러시아를 통한 핵·미사일 고도화 관련 미진한 기술능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함으로써 우리의 안보 환경은 악화되었다.

구조적 요소

북한의 공세적 핵 도발로 인해 한·미동맹, 한·일협력, 미·일동맹,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은 자연스럽게 강화되었고, 북한은 러·북 및 중·북 동맹 강화를 통한 중·러·북 3국 연대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 즉 2023년은 북한의 불법적 도발로 촉발된 역내 모든 전통적 군사 동맹들의 강화로 인해 한·미·일 對 중·러·북 간 세력 경합이 강력한 구조적 영향으로 작동했다. 특히 북한은 新냉전적 질서에 편승해 핵 능력 고도화를 위한 안정적인 전략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항해 우리는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의 공고화를 통해 북핵 위협을 실효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자 했다.

나. 한반도 정세의 평가

2023년 한반도 정세의 특징은 상기 정세 결정 요소들의 작동 및 상호작용을 통해 확인 및 추론할 수 있다. 2023년 우리가 유의미하

게 주목해야만 하는 정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3가지이다.

구조적 요인의 3중첩으로 북한 비핵화 추진 환경이 악화

우선 북핵 교착국면이 더욱 공고화되었다. 기존 남북한 ‘경색국면’ 및 미·북 ‘교착국면’에 더해 한·미·일 對 중·러·북 세력 경합적 ‘新냉전적 질서’까지 정세에 영향을 미치며 북핵 정세의 구조적 경직성이 강화되었다. 3가지 차원의 구조적 제약들이 중첩됨으로써 향후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많은 매듭을 풀어야 할 것이다. 이는 비핵화 추진 비용과 시간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즉 2023년을 기점으로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구조적 환경이 더욱 악화되었다. 즉 어느 세력 일방의 압도적인 승리 대신 당분간 치열한 세력 경합이 예상되므로, 당분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성사뿐 아니라 대화를 통한 타협 가능성도 기대하기 힘든 구도가 형성되었다.

한반도가 강대국들 전략 경쟁의 중심으로 부각

2023년에 6자 회담 시작 이후 20년 만에 역내 6개국 이 한반도에 다시 귀환했다. 그간 한반도 문제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하거나 소외되었던 러시아와 일본이 다시 관여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와 같이 북한 비핵화라는 단일한 목표를 위해서가 아니라, 관여국 모두가 다양한 필요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 차별적이다. 북한의 전술핵 위협이 강화되면서 핵무기가 없는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더욱 절실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 더해 비확산체제를 허물려는 북한 차단을 위해 한·일과

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당분간 북한의 조력이 필요하고, 중국은 미국의 역내 영향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당분간 러·북과의 연대가 불가피하다. 일본은 북한과 중국의 이중 안보 위협을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국가들의 여건을 종합하면 두 가지 시사점을 추론할 수 있다. 첫째, 미·일·중·러 모두가 최소한 남북한 어느 한쪽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둘째,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미국의 역내 영향력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결과 중·러의 전략적 딜레마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남북한이 정세에 적극적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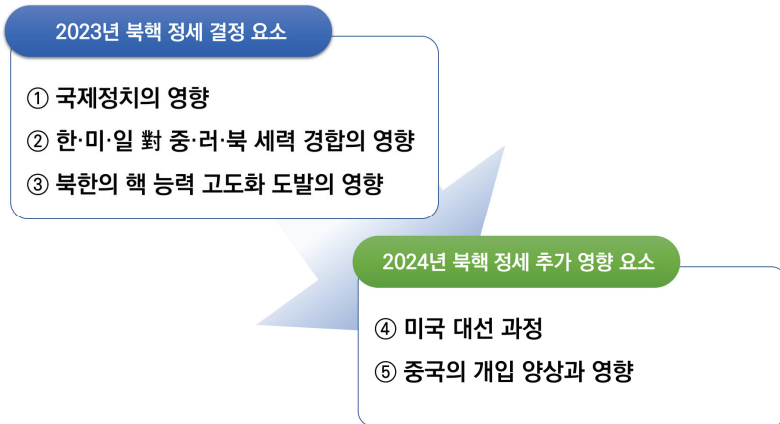
2023년은 우리와 북한이 각자 국제정치적 파급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고자 했던 한 해였다. 우리는 대북 억제력을 최대한 강화하기 위해 워싱턴 선언을 견인했고 일본과의 과감한 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를 주도했다. 북한도 전통적인 중·북 협력체제에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더해 중·북·러 연대 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북한이 핵 개발 야욕을 포기하지 않았고 우리 정부가 과거보다 한층 적극적으로 정세를 주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즉 남북한이 상호 직접적 대결이나 상대 진영의 약화보다는 일단 우호 세력의 규합과 공고화라는 유사한 전략을 채택했다. 특히 북한은 일단 중국과 러시아를 연대의 틀로 묶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대응이 일단 성공했다고 자평(自評)하고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 북한이 대남·대외 정책을 중·러·북 연대의 프레임 속에서 경직된 태도로 임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2. 2024년 전망

가. 정세 예상과 비핵화 대화 재개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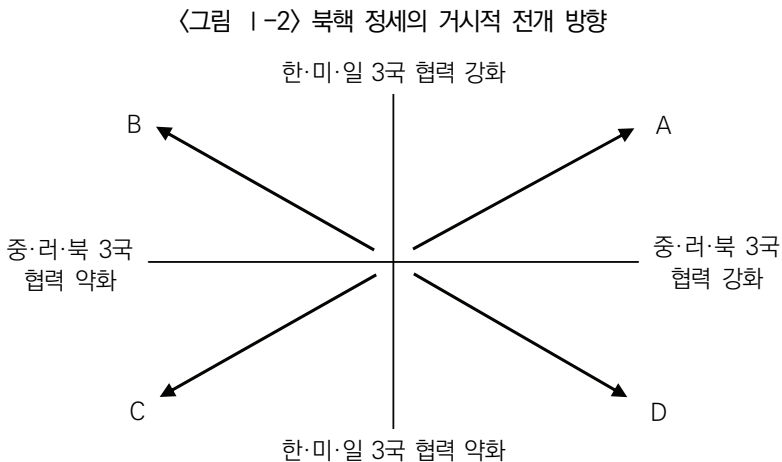
2024년 북한 비핵화 대화 재개 여부는 당연히 북핵 정세를 충실히 반영할 것이다. 북핵 정세는 2023년 정세에 작용했던 요소들의 지속성 여부와 2024년 새롭게 추가 및 강조되는 요소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2024년 정세에 중요하게 작용할 추가적인 정세 반영 요소는 미국의 대선과 중국의 영향력 강화 여부 등 2가지이다. 이를 고려할 때 2024년 정세 결정 요소는 아래와 같이 총 5가지 차원이 될 것이고, 실제 정세 또한 이러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1-1〉 2023·2024년 북핵 정세 결정 요소



정세의 거시적 전개 방향과 특징

2024년에도 2023년의 북핵정세에 미쳤던 행위자, 배경, 구조 차원의 요소 모두가 계속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적 현안의 단기적 해결 가능성이 낮고 북한의 도발 수요와 필요도 높아 당분간 한반도의 新냉전적 질서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대선 변수는 일단 남북한 모두의 전략적 관심이 높고, 바이든 행정부 마지막 해 한반도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 차단, 중·러·북 3국 연대의 주도권 확보, 러시아 견제 등을 위해 한반도 정세 관여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적 영향과 역내 관련국 모두의 전략적 행보들은 결국 한·미·일 對 중·러·북 세력 경합이라는 구조적 요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모든 요소의 상호관계를 고려할 때 2024년의 정세의 거시적 방향은 아래 그림과 같이 양 진영의 경합 과정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2024년 정세는 A 화살표 국면이 유력

2024년은 정세가 A 국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북한의 도발이 지속됨에 따라 한·미·일의 자연스러운 강력 대응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2024년 정세는 A 국면 어느 지점에서 시작될 것인데, 이 경우 정세의 향방은 A 화살표 방향과 같이 계속 우상향하는 경우와 중간 어느 상황에서 B 국면으로 초승달 모양으로 선회하는 상황으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 경우의 정세 특징은 주변국들의 영향력 강화, 북핵 억제력 수준 상승, 러·북의 군사협력 지속 등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후자의 상황은 중·러·북 협력이 균열되거나 공고화되지 못하면서 발생한다. 하지만 북한은 가급적 핵 고도화를 위한 안정적 환경을 확보하려 할 것이므로, 남아 있는 군사 도발 수요를 과감하게 소진하는 강력한 위기 조성 전략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3자 연대에 강력히 묶어두려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과감한 행보 없이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2024년 북핵 정세가 B 국면으로 선회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고 그 결과 북한 비핵화 대화 재개 가능성 또한 지극히 낮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차원의 논리와 현상 때문이다.

나. 비핵화 대화 재개가 난망한 이유

이론적·구조적 차원

A 국면은 구조적으로 안보딜레마가 강력히 작동하는 상황이다. 즉 북한의 핵 고도화 도발 동기가 소멸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미·일의

당위적인 협력 강화가 중·러·북의 연대 필요성을 자극하고, 이는 다시 한·미·일의 자연스러운 현상 유지 노력을 유발한다. 따라서 A 국면은 정세 촉발 요인을 제공하는 북한의 선택이 전환되거나, 협력 모델의 약화 등으로 어느 진영이든 내부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한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북핵 정세가 안보딜레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A 화살표 방향으로 전개되면 결국 모든 당사국들은 능력을 동원해 상대방을 우선 제압하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에 집착하게 된다. 아울러 양 진영 모두 타협을 위해 상대의 기존 요구를 우선 수용하는 것을 패배로 인식함으로써 결국 어느 진영, 어떤 국가도 기존 전략을 변경하는 데 극도로 신중한 상황이 지속된다. 아울러 A 국면에서는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중재 세력의 역할 공간이 상당히 협소할 것이다. 20년 전과 5년 전 중재를 자임했던 중국과 한국이 반대 세력에 각각 위치해있고 이를 대체할 역내 행위자가 구조적으로 부재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론적 차원에서 2024년 비핵화 대화 재개를 전망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소극성과 북한의 무시

2024년 비핵화 대화의 시작이 난망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비핵화 대화의 핵심 주체인 미국과 북한이 각각의 이유로 대화에 큰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원하고 필요로 하나 절박하지 않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조건 없는 대화 재개를 일관되게 제안한 상황이니만큼, 유일한 대안은 북한 요구 수용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대화 제안뿐이다. 최소한 바이든 행정

부가 2024년 이를 채택할 가능성은 낮다. 미국 조야에서 북핵 위협 감소를 목표로 북한과의 군비통제(軍備統制, arms control) 차원의 미·북 대화 필요를 제기하나 아직 바이든 행정부는 이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 2024년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북핵 문제가 지금보다 先순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낮은 점도 부가적 이유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소중한 한정된 외교 안보 자원을 동유럽과 중동의 안정, 그리고 대만 문제의 관리에 우선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선 국면에서 외교 안보 아젠다가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점도 미국의 정책 전환 가능성이 낮은 또 다른 이유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핵 문제는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성과를 낼 수 있는 다른 국제 이슈보다 덜 매력적일 것이다.

2024년에 북한은 대화 재개가 불필요하고 부적절하다는 판단하에 철저히 무시할 것이 유력하다.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비핵화 대화 자체를 정책 선택지에서 제외했다. 북한은 2019년 겨울 “비핵화 이슈는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졌다”라는 공식 입장을 천명한 이후 비핵화 대화 재개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김여정은 2023년 11월 30일 담화에서도 “주권국가의 자주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협상의제로 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우리가 미국과 마주 앉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미국이 자신들의 핵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한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처럼 김정은 정권은 지난 10여 년의 집권 경험을 통해 미국이 정파와 상관없이 자신들에게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先 비핵화 양보

만을 일관되게 강요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들이 미국의 배신으로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는 점을 강변한다. 미국에 대한 강력한 불신이 전제된 이러한 대미 인식이 2024년에도 북한의 대미 전략에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도 당분간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는 정책적 선택 사항이 아닌 배제 요소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북한에게 대화가 긴박하지 않은 점도 2024년 대화 재개 가능성이 낮은 이유 중 하나이다. 즉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이 장기적 메커니즘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북한이 조급하게 대화를 서두를 이유도 불충분하다.

북한은 대화 재개를 불필요·부적절·불리하다고 판단

현재 정세에 대한 북한의 헛되고 과잉된 기대 또한 대화 성사를 저해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북한은 현재 대화 재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불확실하거나 적지만, 핵 능력을 강화했을 경우의 기대 효용은 영구적이며 확실하다고 판단한다. 북한은 지난 30년간 미국과의 5번 타협을 스스로 파기하거나 일방적으로 유명무실화했다.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대미 불신 조장을 자초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은 중·러·북 연대 강화를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핵 능력 증강 목표를 달성한 후, 결국 미국과의 대등한 군축(軍縮, disarmament) 협상을 통해 체제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일거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즉 북한은 新냉전적 질서가 자신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롭다고 평가한다. 만약 북한은 핵 능력 확보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비록 트럼프가 재

집권하더라도 미국과의 대화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당분간 북한은 중·러·북 연대의 허상에 기대어 당장은 대미 비핵화 대화가 불필요할 뿐 아니라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현 정세에서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거나 불편하게 느끼는 점 또한 대화 전망이 부정적인 이유에 해당한다.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 관계의 틀 내에서 자신의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남한 정부가 자신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힘도, 도와줄 의지도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소중한 자원을 대남 정책에 소비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은 가급적 미국과의 직거래를 통해 모든 현안을 일거에 해결하고자 한다. 따라서 한국이나 일본의 주도력이 강화되거나, 북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약한 시기는 북한이 선호하는 정세 구조가 아니다. 하지만 현재의 한·미·일 협력이 공고화되고 남한 정부의 영향력이 증강되는 상황을 북한 지도부는 대화의 시기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이러한 기대와 판단은 허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중·러·북 3국 연대의 지속가능성이 취약하고 북한이 실제 기대하는 효과가 달성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러·북 군사협력의 모멘텀인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소멸하면 러시아는 북한이 원하는 핵 고도화 기술 이전에 신중할 것이다. 중국은 역내 안보딜레마의 강화가 결국 미국의 영향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비호 정책을 재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국은 러시아의 영향력 증대를 견제할 것이므로 중·러·북 연대의 실제 자체도 불확실해질 것이다. 북한이 당분간 산적한 도발 수요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3국 협의체

내부에서 한국의 전략적 입지와 영향력은 북한의 기대와는 달리 더욱 높아질 것이다. 기본적으로 미국이 한국의 독자 핵무장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해야만 하고, 대중국 관계에서 국력이 신장된 한국과의 동맹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금 정세를 잘못 읽고 있다.

3. 정책 제언

가. 정세의 B 국면 선회를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

대화 여건 확보를 위해 新냉전적 질서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
2024년은 비핵화 대화 재개 자체보다, 올바른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바람직한 전략환경 구축에 전념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新냉전적 구도가 강력히 작동할 2024년은 대화 재개도 쉽지 않겠지만 대화가 타협으로 순탄하게 연계될 것이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안보 딜레마가 강력히 작동하는 상황에서 대화 재개 자체만을 목표로 설정하는 경우 북한에게 과잉 양보를 하거나 북한의 의도를 과소평가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불가피한 한·미·일 對 중·러·북 세력 경합의 과정에서 조급하게 대화 재개를 욕심내기보다,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비핵화 대화 프레임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정세 구조와 전략환경 자체를 바꾸는 데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당분간 양 세력 간 경합이 불가피하겠지만, 우리 정부는 가급적 B 국면으로의 정세 전환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3가지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화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를 자극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일 안보협력이 양국의 국내 정치적 문제로 인해 다시 훼손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 셋째, 중국이 러·북의 협력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만 한다.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면 정세가 B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 정책적 차원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상황은 바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적극성을 견인하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선 캠페인과 국제 현안으로 바쁠 것이고, 이미 2023년의 노력으로 한국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했다고 판단하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워싱턴 선언의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중국의 태도를 강제(compelling)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2024년 4월과 9월로 예정된 한국과 일본의 국내 선거가 한·일협력에 미치는 도전적 영향을 차단하려는 양국 정부의 일치된 공감대 확인과 구체적 노력도 필요하다. 2023년 한국의 선제적 결단이 양국 협력을 견인했기에 2024년은 일본의 적극적 응답이 당연한 순서이고 필요하다.

기대효과

우리 정부가 한·미·일 안보협력을 주도적으로 강화하고 중·러·북 연대의 형성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차단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우호적인 북한 비핵화 대화 재개 여건을 형성할 수 있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는 확장억제의 강화를 의미한다. 이는 북한이 2024년 공들여 추진할 고도화 효과를 즉각적이고 강력히 거부(denial)할 수 있는 능력을 한·미·일 3국이 보유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우리가 북한의 핵무장 투자 자원을 매몰 비용으로 전환시킨다면 북한 지도부의 핵 보유 의지는 서서히 약화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지속 가능한 핵 능력 강화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담대한 구상」의 비핵화 조성 여건 방안 중 억제(deterrence)와 단념(dissuasion) 부분의 정책 성과로 나타

날 것이다.

중·러·북 3국 연대의 약화 및 차단은 북한의 핵 고도화 진전을 방해할 뿐 아니라, 장기전을 전제로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는 북한의 썬법을 강력히 간섭하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강력한 안보 자주 노선을 힘들게 견지해온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선택한 배경은, 단기간 자력으로 부족한 핵 능력 기술을 확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고 자신도 없다는 점을 반증한다. 따라서 러·북 군사협력을 성공적으로 방해할 수 있다면 북한의 핵 고도화 완성은 실체 없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것이다. 아울러 B 국면으로 정세가 전환되면 북한은 미국과 직거래를 하기 힘들 것이다. 중·러가 '적절한 수준'으로 대북 정책을 조정함으로써 동맹국 비호보다 미국의 영향력 차단을 우선시할 것이 유력해 중·러·북 3국 연대 자체가 북한의 기대대로 공고화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북한은 미국과의 직거래 대신 한·미·일 3국 대상의 협상 구도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이는 북한이 남한의 전략적 가치를 재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의 대북 교섭 능력(bargaining power)은 상대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나. 북한의 군축(disarmament) 활용 전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

미국의 대북 군비통제(arms control) 담론 부상 가능성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

북한의 강력한 핵무장 결기로 인한 新냉전적 구도의 형성으로 미

국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정책적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조야의 북한 비핵화 비판론과 북한의 핵 위협 우선 차단에 대한 필요성이 동시에 확산될 수 있다. 현재 미국 일각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단기간 일거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일단 북핵 능력의 증강을 차단해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위협 수준을 낮춘 후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하자는 취지의 소위 군비통제적 해결책이 서서히 부상하고 있다. 미국 내 일부는 이러한 접근이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군축 협상이 아니며, 협상이 시작된다고 해서 그 자체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결단코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한다. 따라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결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핵화 과정(process)의 일환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미국의 판단과 다른 해석을 하고 있고 다른 결과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북한은 미국이 군비통제라고 정의하는 그러한 협상을 군축이라 정의할 것이다. 북한이 이처럼 군축에 집착하는 의도는 따로 있다. 첫째, 북한은 핵 능력을 완전히 포기하는 어떠한 협상도 응할 생각이 없다. 실제 김여정은 2023년 7월 17일 담화를 통해 핵 폐기를 주장하는 미국과의 대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둘째, 북한은 군비통제와 달리 군축이 의미하는 일반적 정의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군축은 방어적 목적의 군비 보유도 군비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군비의 완전한 제거를 통해 안전보장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북한은 군축 협상을 통해 한국 내 사드 배치, 방어적 목적의 연합훈련 중단, 핵우산 철폐, 나

아가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 형성이 한반도 평화의 조건이라 평가한다. 북한의 이러한 속내는 이미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군축 협상이 시작되면 미국이 자신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묵인하고, 인정했다고 받아들이고 이를 국제적으로 선전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의 대화 과정에서 북핵 증강 동결과 연합 훈련 등의 교환 조치를 받아들이며 이를 평소 옹호해왔던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과 동의를 견인할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군축 협상 과정을 통해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핵 강대국들이 사실상 북한의 핵 능력 실체와 지위를 인정했다고 역지를 부릴 것이다.

미국의 기대와 달리 북한은 비핵화 실질적 조치를 최대한 늦추려 할 것이다. 설령 북한이 일부 핵 능력의 포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핵 능력 일부를 은닉하고 확보함으로써 실제 핵보유국과 같은 전략적 지위와 효과를 확보하려 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실패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내 성급한 ‘군비통제’적 접근 주장이 북한의 전술적 책략에 악용될 수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고, 미국 행정부뿐 아니라 영향력 있는 전문가 그룹이 이를 지지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특히 바 이든 행정부가 “북한이 요구하는 군축론을 미국이 수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목표에 전혀 변함이 없다. 북한과의 협상과 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이견이 있을 수 없다”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기대효과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군축론을 공개적으로 강력히 거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략적 효과를 수반할 것이다. 첫째, 북한의 한·미동맹 이간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한 핵 위협을 높이면서도 미국 내 여론 형성을 자극하는 군축의 필요성을 간헐적으로 언급해왔다. 북한은 최근 미국의 전문가 그룹 일부에서 소위 군비통제 차원의 비핵화 접근에 대한 견해가 부상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의 적극적 군축 거부는 북한의 기대를 좌절시키는 효과가 있다. 둘째, 북한 지도부의 선택에 간섭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대화 재개를 결정하고 대화를 주도하는 것은 자신들이라고 자만하며, 아마도 전략적으로 필요하거나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대화를 스스로 원할 것이다. 북한이 결국 핵 능력을 보유하면 군축이라는 대화 프레임에 한·미가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좌절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의 취지에 부합한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즉 북한이 핵 능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전제로 군축론을 제기하는 것이 강력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에 현혹될 수 있는 정책적 판단을 강력히 경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 정성윤(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Ⅱ.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중 전략경쟁



1. 2023년 정세 평가

가. 美, 상황관리를 통한 미·중경쟁의 현상 유지

2023년 미·중관계 평가

2023년 미·중은 2월 중국의 미 본토 정찰 비행 사건, 4월 미국 주도의 G7 통상장관회의에서 중국으로의 기술수출 제한 결정, 4월 미 하원의장과 대만 총통의 만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대북 제재 등을 둘러싸고 갈등했다. 하지만 미국이 양국 갈등 수위를 조절하며 상황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준 한 해이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4월 재무장관의 존스홉킨스대학 연설, 5월 히로시마 G20 회의, 6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7월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 등을 통해 미국의 대중정책이 디커플링(decoupling)이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위협을 관리하려는 디리스크링(de-risking)임을 강조했다. 9월 러·북 정상 회담 직후에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몰타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국제 안보를 논의하며 긴장 완화에 나섰다. 미국의 노력으로 성사된 11월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도 양국 간 긴장 관리에 집중되어 있었다. 특히 미국은 9월 몰타 회동 이후 꾸준히 가능성이 제기되어온 미·중 군사 대화 재개에 대해 중국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군사 긴장 완화를 통한 상황관리 의도를 분명히 했다.

미·중 간 긴장관리의 배경: 안보와 경제

미국이 미·중관계를 관리하려 한 배경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라는 대외요인과 함께 국내 경기부진이 있다. 지난 10월 미 역사상 초유의 하원의장 해임 사태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전쟁 지원과 관련해 부정적 여론과 정당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동에서 발생한 또 다른 전쟁은 미국이 미·중경쟁에 집중된 국가자원을 배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분쟁 확대를 우려하면서도 조심스럽게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며, 이란 등 중동국가와 전략적으로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대중견제를 위해서도 중동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지표상 실업률⁴이 팬데믹 이전 수준인 3%대로 안정되어가고 분기별 국민총생산(GDP)⁵도 개선되고(2Q: 2.1%, 3Q: 5.2% 증가) 있지만,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증가로 소비심리, 기대 인플레이션과 같은 체감경기, 즉 민생이 나아지지 않고 있어 미·중관계에 대한 상황관리가 불가피했다 할 수 있다.

4 U.S Department of Labor, <<https://www.bls.gov>> (검색일: 2023. 12.7.).

5 Bureau of Economic Anaysis, <<https://www.bea.gov>> (검색일: 2023. 12.7.).

나. 美, 경제분야에 집중된 인태전략 속 제도화를 통한 우방과의 군사협력 강화

제도화를 통한 군사협력 강화

2023년은 미국이 인태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새로운 협의체를 제도화하면서 역내 우방과 협력을 강화한 한 해였다. 2022년 바이든 정부 주도로 출범한 아태지역 경제협의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외에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QUAD), 민주주의 정상회담(Summit for Democracy), 오커스(AUKUS), 블루 퍼시픽 파트너스(Blue Pacific Partners)와 같은 협의체의 목표와 역할을 구체화했다. 특히 이러한 제도화는 한·미·일 군사협력 부분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워싱턴 선언에 기반한 한·미 간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공식 출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한 3국 정상회의 및 외교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포함한 실무급회의 연례화, 맞춤형 억제전략(Tailored Deterrence Strategy: TDS) 개정 합의도 제도화라는 미국의 인태전략의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제분야에 집중된 인태전략

바이든 정부의 『인태전략서』가 경제에 대한 언급을 가장 많이 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2023년 인태전략의 핵심도 여전히 경제 분야였다. 미국은 올 한 해 반도체뿐 아니라 반도체 생산 장비와 재료의 중국 수출 및 투자 규제를 계속 유지했다. 또한 미국에서 활동하는

우방국 기업에 대해서도 중국 투자 및 생산을 제한하는 「반도체법 (Chips and Science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예외 없이 적용했다. 이러한 경제에 방점을 둔 미국의 인태전략은 권위주의 국가가 포진한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뚜렷이 드러났다. 우주·반도체·방산 등 미국이 관심을 가진 경제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한 9월 뉴델리 G20 참석을 위해 아세안 정상회의에 불참한 바이든 대통령은 귀국길에 베트남을 따로 방문해 베트남과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고 반도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세안과의 양자협력 강화

올 한 해 미국 인태전략의 두드러진 점으로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들 수 있다. 2022년 11월 아세안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아세안이 인태전략의 중심에 있다고 밝힌 이후, 지난 1년간 미국은 기존의 역내 다자기구인 아세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등을 중심으로 아세안 국가와 협력을 강화했다. 그런데 실질적 협력은 인도,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 등과의 양자관계를 통해 더욱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 예를 들어 필리핀과는 필리핀 내 미군 부대(military camps) 4 곳을 추가 사용하기로 합의했고, 11월 APEC회의에서는 베트남과 “123 합의”로 알려진 「민간핵협력합의(Civil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에 서명하여 양국이 비확산, 핵에너지 사용 및 이송 등과 관련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2. 2024년 전망

상황관리 속 기술 경제 패권을 둘러싼 미·중 경쟁 지속

경제지표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이 미국 대선의 표심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임을 고려할 때, 2024년 대선을 치를 바이든 정부의 대내외 정책의 방점은 경제지표 개선에 있을 것이다. 게다가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확보에 중요한 한국, 대만, 그리고 미국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 및 유럽 각국에서도 줄지어 선거가 치러진다. 세계 정치 지도 변화 속에서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군사적으로는 상황관리에 치중하며 경제 실익을 추구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경제부상을 통한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미·중 경쟁의 핵심 분야인 반도체, AI를 비롯한 최첨단 기술 및 관련 공급망 경쟁에서 미국의 양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9월 몰타에서부터 11월 미·중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노력하면서도 10월 17일에는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 업데이트를 통해 중국으로 수출되는 고급 반도체와 제조에 대한 추가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는 사실이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한다. 또한 미·중 정상회담 직후 개최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회의에서 회원국 간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대화체 출범을 논의한 것도 미국의 중국 견제 의지를 잘 보여준다. 특히 미국은 이들 분야가 군사적 용도와 인권침해에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양보는 기대하기 어렵다. 중국 역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가와 공급망 경쟁으로 교역량은 줄고 무역적자가 늘어나 기술, 경제 분야에

서 양보가 쉽지 않다.

하지만 1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미국은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을 피하려고 대만 문제에 신중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반면 중국은 내년 대만 총통선거에서 친미 인사 당선 여부에 따라 관련 대만 및 대미 정책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1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지금까지 미·중 간 의제와는 결이 다른 펜타닐 문제를 마약 문제가 심각한 샌프란시스코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대선용 대중관계’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유사한 맥락에서 확전 가능성은 작아지고 있지만, 장기화하고 있는 두 전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 및 지원 정도 역시 경제회복 상황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자주의에 기반한 인태전략과 중·러·북의 전략적 대응

미국의 대중동관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인태전략도 상황관리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연장선상에서 대북정책도 ‘현상 유지’가 핵심 기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오커스, 쿼드, 한·미·일 군사협력 등 다자협력을 통해 지역 안보를 다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러·북 3국 공조 구체화에 대한 美, 中 회의적 시각…美, 소극적 대응 유지

미국은 권위주의 연대로서 중·러·북 공조 강화 움직임을 우려하지만 3국 연대 자체에 대해 적극적인 직접대응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미국은 중·러·북이 공유하는 이익이 달라 이들 간 공

조의 지속성과 상호신뢰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미국은 외교적 수사와 달리 중·러·북 밀착을 신냉전 수준의 민주주의에 대항하는 연대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사실 중국은 국력과 이익의 관점에서 차이를 보이는 러시아와 북한 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북한의 7월 전승절 행사에 러시아가 국방장관급을 보낸 것과 달리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부위원장을 보낸 것도 러·북과의 밀착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9월에 발표된 미국 의회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중국의 이러한 모습에 주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요청 및 중·러·북 연합군사훈련 제안에 대한 중국의 소극적 태도에 주목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타이완 문제개입 등에 대한 우려로 중국과 동맹관계를 추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도 러시아와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장기적 목표하에 공조를 추진한 다기보다 러시아로부터 기술 이전을 통해 핵 고도화를 하려는 의도가 크다. 미국도 북한이 미국을 자극하고 한·미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 경고하기 위한 전략으로 러시아와 공조를 강화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국제질서의 큰 변화가 없는 한 미·중 모두 중·러·북 연대에 기존과 크게 다른 형태의 반응이나 협력을 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美,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확대 강화

남중국해에 포진해 있는 아세안 국가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은 간접적 중국 견제라는 면에서 미국에 중요하다. 게다가 유럽과

중동의 전시 상황으로 인해 원료공급 및 시장으로서 아세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아세안 지역에서는 가치 외교를 절제(low key)하며 선별적 관계 강화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풍부한 자원과 인구를 바탕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필리핀과의 관계 강화가 예상된다. 이 두 국가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문제로 갈등하고 있어 중국을 견제한다는 면에서도 중요하다.

美, 지역안보를 위한 우방 및 동맹의 역할 확대 요구

2024 미국 대선, 경기둔화, 그리고 두 개의 전쟁(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으로 인해 미국은 지역 및 글로벌 안보에서 우방과 동맹에 더 큰 기여와 역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주자로 확정되고 경선 상황이 민주당에 불리해질수록 바이든 정부(혹은 민주당 후보)는 동맹의 기여와 역할 확대를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연장선상에서 오키스, 쿼드 등의 다자안보 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미·일 간 군사협력 합의에 기반해 한국과 일본에게 중국 견제, 북핵 관리, 전쟁 지원 등과 관련해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3. 정책 제언

한·미·일 협력 속 주도적 대북정책 추진 필요

2023년 한·미·일 안보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했지만, 각 국가가 처한 국내외 요인들로 인해 상호 약속한 협력에 얼마나 최선(commitment)을 다할지 불확실한 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국익을 확보하면서 신뢰할만한 3국 협력을 가능하게 할 구체적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은 북핵 공동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3국 군사협력을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이 3국 군사협력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며 보다 넓은 지역에서 안보를 확보하는 데 방점이 있다. 따라서 한국은 지역안보 차원에서 대테러, 팬데믹, 자연재해 등에 이바지할 방안을 주도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대신 한국의 지역 안보 기여에 상응하는 북한 비핵화 관련 협력을 미국과 일본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미국의 핵 억지 제공과 미·일의 정보 공조와 같은 억지 차원의 협력 외에 핵 협상, 군축 등 비핵화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방안과 대안에 대해 미·일이 한국과 함께 전략적으로 협력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연장선상에서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중경쟁으로 미국이 현상 유지라는 대북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미국을 자극하기 위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그런데 대북정책을 국제정치 구조의 하위정책으로만 바라보는 경우 세계 질서의 변화나 미국 또는 북한의 획기적 정책변화 없이는 북핵 문제 해결 및 남북관계 개선은 어렵다는 결론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서도록 할 유인

(incentive)을 구체화하는 등 3D 원칙의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3D와 킬체인이 무력도발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美 대선 정국을 고려한 對미 네트워크 구축 및 경제협력 전략 마련

현시점에서 미국 대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우선 엄격하게 바뀐 선거제도 변화가 직접적으로 투표율과 선거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배경적 요인으로는 두 전쟁의 진행 과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지표 개선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종, 이민, 치안 문제를 포함한 경제 불평등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전부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내년 대선은 그 어느 대선보다 경제 선거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론상 경제지표 개선은 현직 대통령의 재선 확률을 높인다. 또한 일반적으로 전쟁 자체는 국민 응집을 가져와 현직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지원이 장기화되고 경제지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은 작아질 것이다. 공화당 지지자 사이에 인기가 높다고 알려진 공화당 유력후보 트럼프의 승리도 예단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트럼프의 선호도도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약간 앞선 40% 대로 과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경쟁을 벌이고 있는 두 후보 모두 고령으로 경선 과정에서 건강 이상으로 인한 돌발 변수도 배제하기 어렵다. 게다가 제3의 후보 출마 시 당선 가능성은 작지만 이들이

양당 유력후보의 득표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엇보다도 양당 후보 모두 경제지표 개선을 위해 우방에게도 배타적인 미국경제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공화당과 민주당 주요 인사 및 의회 분파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한국의 경제이익을 확보할 대미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신중한 주변국 외교전략 및 적극적 對아세안 정책 추진 필요

미국이 중국, 러시아, 북한 그리고 중동과의 관계 관리가 예상되는 바 이들 국가에 대한 메시지 발신에 유의하고 관계가 악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미국이 대외수사와 달리 중·러·북 공조를 장기적이고 안정적 연대로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러·북을 하나의 연대로 보고 대립각을 세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미국이 경제에 집중한 미·중경쟁을 할수록 중국의 경제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아세안 국가와 경제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미국 및 쿼드 참여국이 외교를 강화하고 있는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와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에 기반해 협력을 구체화해야 한다. 하나의 군사안보체로 인식되는 것을 우려하는 아세안 국가들은 해양, 사이버, 우주 안보에 관한 관심이 높다. 특히 이들 국가는 안보와 관련해 미·중 사이에서 아세안의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어 미·중 밖의 한국과 방산 협력을 하는 데 관심이 크다. 중국이 외교를 강화하고 있는 남태평양 도서국과도 교류를 확대하고, 특히 인접 우방 호주와 해양 안보를 중심으로 협력을 다각화해야 한다. 인태국가들이 성장에 관심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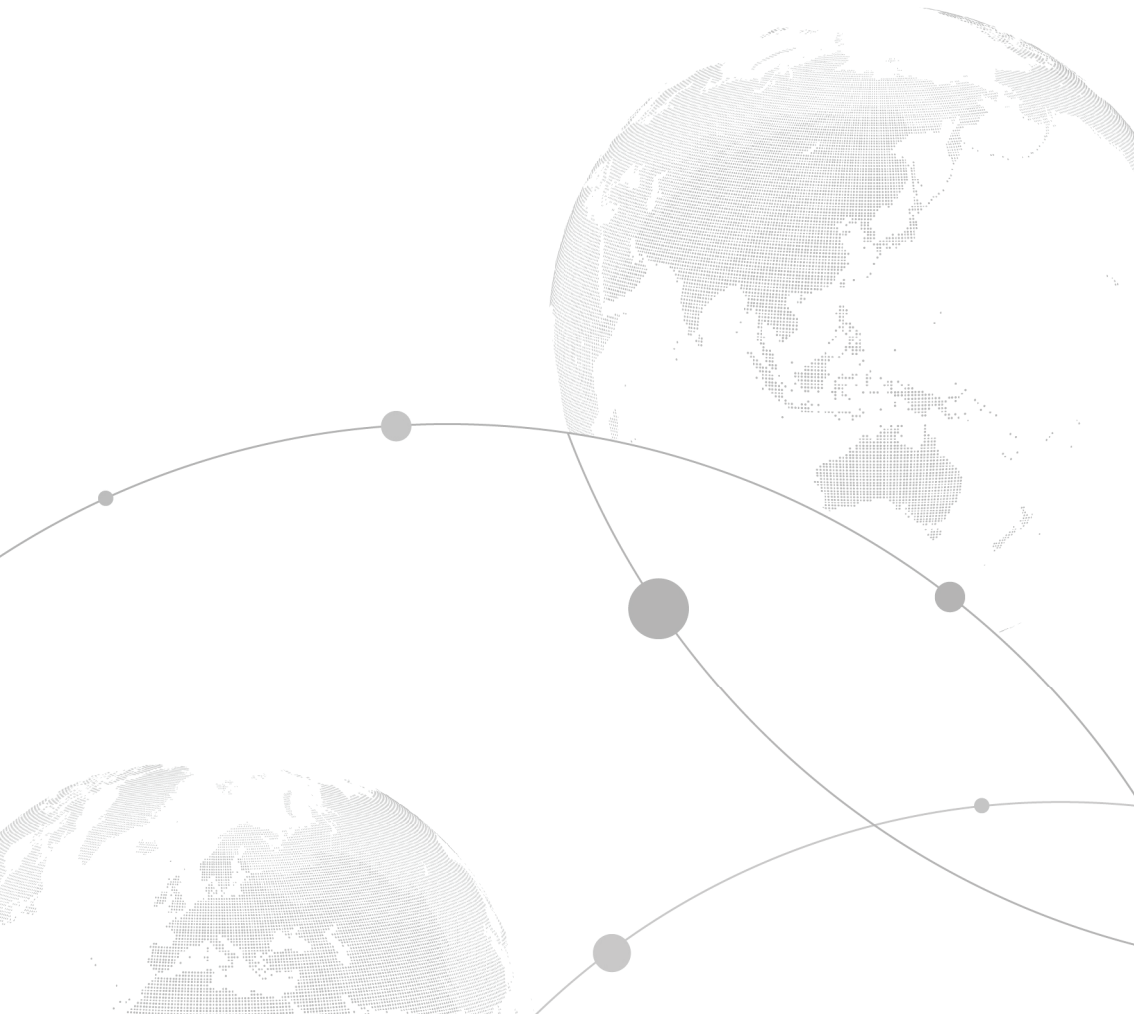
는 점에서 해당 지역에서 아세안+3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일본에 아세안 핵심 산업인 농업 분야를 비롯해 자원개발, 도로, 항만, 공공시설을 포함한 인프라 구축 등의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미·중관계 밖에서 경제외교를 강화하고 한·일협력의 새 영역을 개척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또한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이 유력한 중재자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도 다각적 협력강화가 중요하다. 연장선상에서 아세안의 다수 국가가 권위주의라는 점에서 해당 지역 국가와의 외교에서 가치를 전면내세우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어 신중한 가치외교를 추구해야 한다.

韓, 안보역할 확대 및 핵무장과 관련한 국민 여론 수렴 필요

전쟁지원과 같은 글로벌 및 역내 안보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는 국민의 지지가 필요한 사안이다. 관련해 국민의 공감을 얻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의 핵 도발이 강화되면서 자체 핵 개발 논의가 언제든 재점화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미국의 우방에 대한 예방적 안보 제공 능력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정찰위성까지 발사함으로써 핵 보유를 포함, 독자적 안보구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질 수 있다. 미국의 핵 억지와 한국의 핵 보유가 각각 가지는 우려사항에 대해 정부와 국민 간 열린 소통이 필요하다.

- 민태은(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연구위원)

Ⅲ. 러·북 밀착과 중·러·북 연대 가능성 전망



1. 2023년 정세 평가

러·북 밀착 본격화

북한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러시아의 군사 행동을 지지하면서 적극적인 친러 행보를 이어갔으며, 2023년에도 이 같은 움직임은 계속됐다. 특히 2023년 1월 27일 북한이 러시아와 ‘한 전호(참호)’에서 있을 것이라고 말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가 러시아 관·학계에 큰 울림을 주었으며, 러시아 내부에서는 북한과의 관계 강화 및 대북 제재 무력화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다.

2023년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러시아는 노골적으로 북한을 두둔하는 뜻을 견지했다. 2월 10일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 성명이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채택되지 못했으며, 10월 10일 열린 유엔 회의에서도 러시아 대표는 대북 제재가 효력을 잃었다며, 공개적으로 제재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확인했다.

러·북 밀착은 러시아의 대외정책 변화와도 관련된다. 러시아는 2023년 3월 31일 개정 발표한 ‘러시아연방 대외정책개념’에서 미·서방 국가들과의 ‘문명적’ 단절을 선언하고, 미국 패권의 종식과 다극화 세계 질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반미 성향의 국가들과 연대할 것을 천명했다. 북한 역시 대미 적개심을 불씨 삼아 러시아와의 반미, 반제국주의 연대 구축에 전념하는 형국이다.

2023년 하반기 들어 러·북 밀착은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7월 27일 북한의 전승절에 맞춰 쇼이구 국방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열

병식에 참석한 것을 필두로, 9월 13일에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10월 19일에는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최선희 외무상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11월 15일에는 제10차 러·북 경제공동위원회가 개최되어 두 나라 사이에 무역과 과학·기술 등 협력 방안에 합의하고 의정서에 조인했다.

러·북 군사협력 가시화

푸틴 대통령은 2023년 9월 러·북 정상회담 장소로서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에 위치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선택해 러·북 군사협력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정은을 수행해 러시아로 건너간 북한 수행단의 면면도 이 같은 의심이 충분히 근거가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군 서열 1위인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2위인 박정천 당 군정 지도부장뿐만 아니라, 김명식 해군사령관, 김광혁 공군사령관 등 북한군 수뇌부가 총출동했기 때문이다. 김정은 일행은 정상회담을 마친 이후에도 4일 동안 콤소몰스크나아무레에 있는 신형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57 생산공장, 블라디보스토크에 위치한 러시아 해군 태평양함대 사령부 등, 극동 지방의 러시아군 주요 거점과 본부를 두루 시찰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제기되었던 북한 군수물자의 대러 제공설은 2023년에 더욱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면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미국 정부와 언론은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과 포탄, 재래식 무기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고급 군사기술을 제공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는 한편, 러·북 정상회담 이전에 이미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군사 장비가 북한을 떠나 우크라이나 전장 부근까지 운송되었다면서 증거 위성사진을 제시했다. 한국 정부도 북한이 100만 발 이상의 포탄과 기타 재래식 무기를 러시아에 보냈다고 주장하며, 제재를 위반한 러시아를 규탄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북 정상회담에 임하기 전 자국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우주위성 개발에 러시아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군사협력을 의제에 포함하겠다고 말해 양국 간 군사협력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후 군사협력에는 “특정 한계가 있다”라고 발언하는 등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한 비난을 의식한 듯 신중한 모습이다. 러시아와 북한은 양국 군사 거래 주장이 미국의 정보전일 뿐이라며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러·북 밀착에 대해 중국은 대국 외교와 한반도 주변국 외교의 이원화 전략 펼쳐

중국은 러·북 밀착에 일단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한·미·일의 군사안보협력을 통한 대중 압박과 견제, 중국 핵심 이익(대만 문제) 개입이 가속화된다고 판단할 때 중·북/중·러 양자관계 강화를 통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그 방식은 중·러관계의 ‘대국 외교’와 중·북관계를 포함하는 ‘한반도 주변국 외교’의 ‘이원화 전략’을 통해 중국이 대외적으로 반대하는 신냉전의 진영화 논리를 우회하면서도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에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할 것이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대국 외교 속에서 미국의 패권주의 반대, 다자주의와 다극화, 글로벌 정치경제 체제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 국제사안 관련 신흥시장과 개도국 대표성 발언권 확대 등 주로 대미 메시지를 발설하고 있다. 특히 10월 18일 일대일로 정상 포럼에서 중·러 정상회담, 10월 19일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북한 최선희 외무상과 회담 등 중·러·북 사이 일련의 연쇄 회담을 통해 중·러·북 상호 전략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2023년 7월 27일 북한 전승절 70주년 리홍중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리우귀중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대표단 파견으로, 일각에서는 과거에 비해 대표단장의 격이 낮아진 것에 대해 중국의 북한에 대한 홀대나 북한의 중국에 대해 서운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정확하지 않다. 중·북 사이에는 이미 2018년 이후 다섯 차례 정상회담과 코로나19로 중단된 각 분야(교육, 문화, 체육, 청년, 지방, 민생경제) 교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APEC회의 미·중 정상회담(11월 15일)에서 시진핑 주석은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과 9월 13일 유엔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에 중국이 보낸 탈북민 강제 복송에 대한 입장에서 북한에서 대규모 인권 침해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 것을 볼 때 중국은 여전히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국제사회와 미국을 의식해 중국은 대북 제재와 무관한 교류를 추진하고, 군사와 같은 대북 제재를 위반 가능성이 있는 교류는 러·북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진행되면서 중·러 상호 역할 분담을 통해 북

한 체제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여전히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증거이다. 특히 11월 21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관련 안보리 대북 제재 관련 중·러의 일치된 의견은 추가 제재 반대와 정치적 해결과 대화 중시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스냅백 조항 등을 통한 선 제재(민생 관련) 완화와 한반도 정세 악화의 미국 책임론을 통해 한반도 정세 관련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2. 2024년 전망

러·북관계 진전 가능성 커

2024년에도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 관계는 지속될 뿐만 아니라, 두 나라가 처한 전략환경에 따라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 전쟁 추이와 무관하게 러시아와 미·서방의 관계는 회복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러시아에 부과된 경제·금융 제재 역시 완화되거나 해제되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북한, 이란 등과의 연대를 통해 글로벌 반미 전선을 구축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러시아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북한의 위상과 중요성도 유지 또는 격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러시아의 대북 밀착도 2023년의 수준 이상으로 강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024년 3월로 예정된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푸틴 대통령의 재선이 유력하다. 만일 푸틴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그의 임기는 2030년까지이며, 이후의 연임을 고려한다면 2036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사실상의 종신 집권이 가능한 셈이다. 푸틴 집권의 연장은 현재 러시아의 대외정책 노선이 큰 변화 없이 10년 이상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패나 러시아의 대내외 환경 변화와 무관하게 반미, 반서방 노선을 견지하면서 미국 패권 종식과 다극화 세계 질서 구현이라는 지상 목표를 추구하고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에는 정치 분야에서 러·북 간 고위급 인사 교류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양국 연대의 가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경제 및 사회 분야에서도 다각적인 협력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관광, 공동 지질 탐사, 교육, 스포츠 등 10차 러·북 경제공동위원회에서 합의된 협력이 본격화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와 북한이 처한 제재 상황을 감안하면 그 속도나 규모는 크지 않으리라고 예측된다.

한편, 2024년에는 북한 노동자의 대러 송출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로부터 빼앗아 자국령으로 편입한 4개 지역의 전후 복구가 시급하나, 징병과 청년층의 해외 도피 등 때문에 인력난이 심각하다. 그동안 러시아는 질 좋은 북한 노동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도, 대북 제재 위반 우려로 인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2024년에는 북한 노동자 수입을 위해 대북 제재 결의의 인도주의 예외 조항을 적용하거나, 또는 국내법이 국제조약에 우선한다는 헌법 조항 등을 활용하는 등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군사협력 실태 파악 난망

2024년에 러·북 간 군사협력이 어느 수준까지 진전될지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될 경우, 북한은 러시아군이 사용할 탄약과 포탄, 재래식 무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러시아는 그 대가로 군사기술 지원의 수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두 나라 간 군사협력과 무기·기술 거래의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이나 한국, 기타 서방 국가들로부터 유력한 증거가 제시되더라도, 러·북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이를 미·서방의 ‘선전전’으로 몰아 일축할 것이다. 또한 러시아는 북한

과의 군사협력을 극비리에 추진함으로써 한·미·일 등 적대국에 불안과 우려를 증폭시키는 심리전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한·미·일 안보협력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러·북 밀착을 추동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북한의 군사 도발과 이에 대한 러시아의 비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2024년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인정받기 위해 더욱 과감한 행보를 보일 수 있으며, 대러 군수물자 지원 체계를 확대·강화함으로써 몸값을 키우려 할 것이다. 또한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발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세부 목표들 가운데 실패했거나 부진한 분야(정찰위성, ICBM 재진입, 핵잠수함, 전투기 등)를 중심으로 러시아의 지원을 견인하려 노력할 것이다.

2024년에는 북한과 러시아가 모두 핵 공격 위협을 극대화하며 미·서방에 대한 ‘벼랑 끝 전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는 2023년 11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CTBT)을 탈퇴했으며, 이것이 북한의 핵 실험을 추동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이 실제로 7차 핵 실험에 나설지는 미지수이나, 만일 북한이 이를 감행할 경우, 러시아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활용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와 규탄 결의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중·북, 중·러 수교 75주년 중·러·북 외교·군사·경제 분야에서의 가능성 전망

외교 분야에서 중·러·북 3국 간 협력은 긴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방식은 중·러의 ‘대국 외교 주도’와 중국이 주도하는 ‘주변국 외교 (한반도 외교) 보완’의 이원화 전략을 통해 한반도 평화 안정과 한반도 영향력 확대를 추구할 것이다. 특히 내년은 중국과 북한·러시아 사이 수교 75주년 정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중국은 외교 분야에서 러·북과의 연대를 통해 다극화와 진영화 반대 외교를 적극 추구할 전망이다.

군사 분야 무기 거래를 포함한 러·북 간 협력은 심화할 것이나 중·북 군사협력은 상대적으로 저조할 전망이다. 중·러·북 연합훈련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중·러 간 연합훈련은 이미 정례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중·북 군사협력 저조가 중·북 관계의 악화는 아니다.

경제 분야에서 중·러 간 협력이 가능할 수 있으나, 북한 포함 3국 간 경제협력 가능성은 작고, 주로 중(러)의 대북 지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중·러, 중·북 경제협력은 주로 제재 회피와 제재 무력화 시도일 것이다.

3. 정책 제언

정세 추이 따라 한·러관계의 수위 조정 필요할 수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 발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저하되고 미·서방의 대 우크라이나 지원이 약화할 수 있으며, 2024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 가능성도 있다. 러·우 전쟁의 승패가 향후 러·북 관계의 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우리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 정세 추이에 따라 한·러 관계의 수위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러시아 지정학에서 갖는 완충지대로서의 중요성은 불변하며, 러·북 간 반미 연대 구축 노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한·러관계 개선이 러·북 밀착의 추동력을 약화하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적 군사 지원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하되, 대러 외교는 기본적으로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며, 명확한 대러 적대감 표명 등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러·북 밀착이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러·북측 주장은 억지이나, 러시아는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동아시아판 나토’ 계획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경계한다. 최근 러시아 언론과 전문가 담론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적극 대응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신냉전’을 추동하기보다 도발 억지 및 분쟁 방지, 평화 여건 조성에 기여한다는 논리를 강화하고 이를 러시아 및 국제사회에 확산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한·미·일 경제안보협력 강화 … 중·러 제재 무력화 적극 대처 필요

동시에 한·미·일 경제안보협력을 강화하여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제재 무력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등 추가 도발 관련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중국과 러시아 기업에 대한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를 한·미·일 3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한·일·중 협력을 통해 중국을 러·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전략도 추진해야 한다. 특히 한·미·일 3국 간 협력 혹은 대만과 남중국해 사안에 대한 한·일과 중국 사이 이견과 한·일·중 3국 협력 메커니즘을 지나치게 연계하는 것을 지양하고, 정체된 3국 간 협의체 적극 가동, 국민 체감 가능한 실질 협력 사업 발굴, 역내 안정과 번영 기여 협력 저변 확대 등에 집중해야 한다.

중의 건설적 역할 촉구 필요 … 중동 평화보다 북핵문제 우선순위 필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수교 중재 및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관련해서 중국의 외교 성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순회의장국인 중국이 중동 평화에 기여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한반도 정세 악화에 대해 중국이 중동의 평화에서 보다 더욱 우선적으로 건설적인 역할을 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 현승수(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연구위원)
이재영(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연구위원)

IV.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김정은 통치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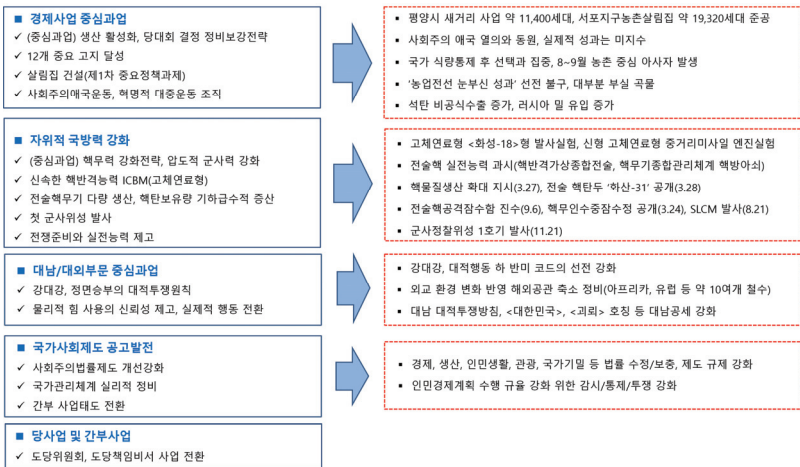


1. 2023년 정세 평가

전술핵 실전화 및 신형무기 통한 핵무력 강화와 핵보유 불가역적 완수에 중점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제시한 2023년 주요 기조는 국방력 강화, 대남·대미 대적행동 강화, <새 시대 당건설 5대 노선> 통한 당적 통제 강화, 경제부문 12개 주요고지 진전, 살림집 건설, 대중동원 및 사회주의제도 강화를 통한 사회통제 등이었다. 2023년 가장 역점을 둔 분야는 국방력 강화 부문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23년 과업으로 제시된 신형 무기 실험을 완수하는 데 주력했는데, ① 고체연료형 <화성-18>형 발사실험, ② 신형 고체연료형 중거리미사일 엔진실험, ③ 전술핵공격잠수함 진

〈그림 IV-1〉 2023년 제8기 제6차 당중앙위 전원회의 제시 과업과 수행 결과



출처: 저자 작성

수, ④ 핵무인수중잠수정, ⑤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ubmarine-Launched Cruise Missile: SLCM) 실험발사, ⑥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등 군사적 효용성 차치하더라도 계획한 무기체계의 기술적 시도를 완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국가 핵무력정책 헌법화’를 통해 핵개발의 불가역적 완수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데 주력했다.

군부대 및 주민 동원 대규모 살림집 건설, 군수생산 투입 등 노동력 부족

북한은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2021~2025년까지 평양에 해마다 1만 세대씩 모두 5만호 주택 건설을 발표, 2022년 송신·송화지구 완공, 2023년 화성지구 1단계 완공, 2024년 화성지구 2단계 및 서포지구 완공 예정 등 매년 계획에 따라 건설을 진행 중이다. 평양의 대규모 살림집 건설은 수도방어군단을 비롯한 주요 부대들을 동원해 건설하고 있고 지방 살림집 건설은 지방 주둔 부대들이 동원돼 건설하면서 양적으로 일정한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생산 및 건설 관련 가용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살림집 건설 동원, 러시아 지원 및 북한 내부 전력증강용 군수생산 투입, 인민경제 투여 노동력 등 노동력 운용에 있어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공개활동, 경제 거리두기와 대내외 과시용 열병식 및 선별적 참관에 주력

김정은은 2023년(12월 8일 현재) 총 76회의 공개활동을 했는데,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55회로 급격히 줄었던 활동이 2021년 이후 소폭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중 군사부문(무기시험, 훈련, 시찰)에 대한 활동이 17회로 가장 많았고 경제단위에 대한 현지도는 4회로 2020년 이후 계속 한 자리 숫자에 머물고 있어 가장 소극적인 활동량을 보여줬다. 김정은의 경제부문 현지도는 내각총리의 ‘현지요해’가 대체, 사실상 김정은은 4년째 경제와 거리두기를 한 채 무기 개발이나 훈련 등 군사부문 활동에만 집중하고 있다. 2023년에는 역대 연간 최다(3회)의 열병식을 진행, 무력 과시에 집중하면서 대내외적으로 국방력 강화 성과를 보이는 데 주력했다. 2023년 한 해는 ‘신냉전’ 정세 인식을 부각시키며 ‘반미코드’와 ‘진영화’에 편승한 대외정책을 노골화하는 한편 핵무기 고도화, 군수생산 증대, 러·북 밀착 등을 주요 성과로 내세우는 데 집중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2024년 전망

가. 2024년 한반도 및 세계 주요 정치·군사 일정, 주목할 지점

미국 대선 및 러시아 대선을 전후, 북한의 군사 및 외교 활동 강화
 한반도 및 북한 관련 주목할 정치·군사 일정은 ‘선거’ 관련 일정이
 다. 올해 1월 대만 총통 및 입법위원 선거, 3월 러시아 대선, 북한
 대의원 선거, 4월 한국 총선, 11월 미국 대선 등이 있다. 대만 총통
 선거 전후 미·중 간 갈등과 긴장 고조, 러시아 대선 이후 푸틴의 대
 외정책 및 러·북 밀착, 한국 총선 전후 북한 대남 공세 및 군사행보,
 미국 대선 전후 북한 및 관련국의 대외 행보 등이 2024년 한반도
 및 국제 정세의 중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두고 반미코드의 공세를 강화하면서 미국 차기 행정부에게
 ‘비핵화 불가, 불가역적 핵보유’를 강하게 각인시키기 위해 핵·미사
 일 고도화 과시에 더욱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 러·북 모두 대미 견제
 및 압박에서는 일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 3월 러시아 대선 이후 러·
 북 밀착을 강화하는 고위급 및 정상외교를 가동할 가능성도 있다.

〈표 IV-1〉 2024년 한반도 및 세계 주요 정치·군사 일정

월	북한		한·미(일)연합훈련(예상)	국제
1월	(1/8) 김정은 생일(40주년) (1/14) 노동적위군 창건일 65주년	동계훈련 ·육상훈련 ·함대기동/사격 훈련		(1/13) 대만 총통 및 입법위원 선거
2월	(2/19) ‘온 사회 김일성주의화 선포 50주년 (2/25)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발표 60주년	·전투준비 ·판정검열	확장역제수단운용연습(TTE)	(2/14) 인도네시아 대선

월	북한		한·미(일)연합훈련(예상)	국제
3월	(3/1) 3.1절 105주년 (3월 초)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		독수리연습(FE) (FTX) 쌍용훈련(한미 해병대 상륙훈련) 한미연합 잠수함훈련(SUBEX) 한미연합 대잠전훈련(ASWEX) 한미연합 전술비행훈련 (Teak Knife)	(3/17) 러시아 대선 중국 양회
4월	(4/14) '당의 유일사상체계 10 대원칙' 발표 50주년		(4/10) 한국 총선 독수리연습(FE) 한미연합 지휘조 연습(CPX) 한미 연합잠수함 훈련 (SUBEX)	
5월		영농기 (5.1~6.14)	Max Thunder 한미연합공중 훈련 한미 연합잠수함 훈련(SUBEX)	(5/1) 인도 총선
6월	(6/23) 선박공업절 [6.25~7.27: 반미공동투쟁 월간]			(6/2) 멕시코 대선 (6/9) EU 집행부 선거
7월	(7/3) 전략군절 7월 8일 김일성 사망일 30주기	하계훈련 ·합대기동/사격 훈련 ·복합전술훈련 (대잠, 상륙) ·지해공 합동훈련 (기동/침투) ·연간 훈련 판정 검열	Pacific Thunder (한미 연합수색·구조훈련) Flash Knife (연합해상침투훈련)	
8월	(8/20) 공군절 (8/25) 선군절 (8/28) 해군절		을지프리덤실드(UFS) 한미연합 대잠전 훈련 (SHAREM) 한미연합 전술비행훈련 (Teak Knife)	
9월	[9.8~9.14: 주한미군철거 투쟁주간]		한미연합 대잠전 훈련 (SHAREM)	
10월	(10/6) 중·북수교 75주년		한미 연합잠수함 훈련(SUBEX) 한미 연합대잠전훈련 (ASWEX) 한미연합 전술비행훈련 (Teak Knife)	
11월	(11/18) 미사일공업절 (11/29) 항공절	월동준비	비질러트 스톰 (한미연합공중훈련)	(11/5) 미국 대선
12월			Pacific Thunder (한미 연합수색 및 구조훈련)	

출처: 저자 작성

북한의 9·19 군사합의 파기 움직임과 한국 총선 국면

북한이 한국 총선을 앞두고 한국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부각하고 선거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취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상·공중·해상에서의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직접적 군사 도발보다는 9·19 군사합의 파기를 행동으로 옮기는 순차적 복구 행위 및 지상·공중·해상에서의 군사 활동량을 증가시키며 긴장을 조성하고 압박하는 양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한·미(일) 훈련기간을 명분으로 전술핵무기를 보유했다는 ‘비대칭성’을 과시하는 지상·해상에서의 미사일 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재래식 무기에서 한국 및 한·미에게 절대적 열세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자칫 과거와 같은 도발을 했을 때 치명적 응징정보복을 당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할 가능성이 있다. 국지적 도발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지만, 그보다는 핵무기 보유의 ‘비대칭성’을 시위하는 방식으로 일정한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

나. 북한 정치 분야

(정책기조) 美 대선 국면 염두 핵·미사일 개발 불가역성 과시, 교역·관광 확대와 내부 관리 초점

2024년 북한의 전반적 정책기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

- (1) 핵·미사일 고도화 정책기조 속에서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 4년차 성과 극대화

-
- (2) 진영 구도에 편승한 반미코드 선전 프레임의 강화, 진영내 핵 보유국 승인 효과
 - (3) 러·북 간 군사협력 및 외교적 밀착 강화
 - (4) 중·북수교 75주년을 활용한 고위급 외교, 중·북 교역 및 관광 유치 활성화
 - (5)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4년차 성과 내기
 - (6) 최고인민회의의 제15기 대의원 선거 계기 대규모 인사 및 중장기 국가비전 발표
 - (7) '당의 유일사상체계 10대 원칙' 발표 및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 선포 50주년 계기로 김정은의 <새 시대 당건설 사상>의 전면화

(정책담론) 김정은 생일 40주년과 '유일사상체계 10대 원칙' 50주년 계기, 유일영도체계 강화 및 당·국가 인적 쇄신

2024년은 김정은 생일(1984.1.8.) 40주년,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 강령 선포(1974.4.14.) 50주년,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 원칙' 발표(1974.4.14.) 50주년 등이 교차하는 해이다. 북한은 연초부터 김정은의 유일영도체계 및 독자적 '새 시대 당건설사상'을 전면적으로 부각시키며 우상화를 확대·강화하는 한 해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당 중앙위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당건설 노선으로 채택된 '새 시대 5대 당건설사상·이론(정치, 조직, 사상, 규율, 작품)'을 전면적으로 내세우며 김정은의 독창적 사상과 이론가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킬 가능성이 있다. 상반기부터 사상일꾼대회(제8

차 2014.2 개최), 5대 당건설노선을 하부단위로 관철하는 명분 아래 간부들에 대한 혁명화 및 인적 교체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위기는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 등과 연계돼 전반적인 당 및 국가기관 인적 쇄신의 계기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정치행사) 정주년 열병식 없는 2024년, 주요 군중 기념일 활용한 무력 과시 및 이벤트

2024년 주요 기념일 중 정주년에 해당하는 기념일이 없어 처음으로 대규모 열병식 없는 한 해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⁷ 김정은 집권 이후 태양절, 건군절, 조선혁명군, 정전협정체결일, 정권수립일, 당창건, 당대회 등 7개 기념일에 14차례 열병식을 개최한 바 있다. 주요 정치 기념일은 아니지만, 정주년이 있는 기념일로는 ‘김일성 사망’(30주년), ‘노동적위군 창건일’(65주년),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 강령 선포일’(50주년),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50주년), ‘증·북수교’(75주년) 등이 있다. 최근 해군, 공군 현대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선박공업절(6.23), 전략군절(7.3), 해군절(8.28), 미사일공업절(11.18), 공군절(11.29) 등을 활용한 무력 과시 가능성이 있다.

6 2014년 2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 강령 선포 40주년을 맞아 제8차 사상일꾼대회를 개최하여 전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영도체계 확립을 주문한 바 있다.

7 김정은 집권 이후 정주년이 없어 열병식을 개최하지 않았던 해는 2014, 2016, 2019년 세 차례다.

〈표 IV-2〉 김정은 집권 이후 역대 열병식 개최 동향

기념일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태양절 (4.15)	○ 100주년 (참/연)					○ 105주년 (참)							112	2
건군절 (2.8)							○ 70주년 (참/연)					○ 75주년 (참)	76	2
혁명군 (4.25)		예식									○ 90주년 (참/연)		92	1
전승절 (7.27)		○ 60주년 (참)										○ 70주년 (참)	71	2
공화국 (9.9)		○ 65주년 (참)					○ 70주년 (참)			○ (참)		○ 75주년 (참)	76	4
당창건 (10.10)				○ 70주년 (참/연)					○ 75주년 (참/연)				79	2
당대회										○ (1.14) (참)				1
합계	1	2	0	1	0	1	2	0	1	2	1	3		14

주: ○ 야간 / '참' 김정은 참관 / '연' 김정은 연설, □ : 정주년(5년 단위)
출처: 저자 작성

(정치부문)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 통해 중장기 국가비전 발표 및 인적 교체 단행 가능성

2019년 3월 10일 출범한 제14기 대의원 임기 5년이 종료되는 3월 초 최고인민회의의 제15기 대의원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김정은은 대의원 선거 이후 최고인민회의의를 통해 향후 5년간의 중장기 국가비전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11월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둔 국제 정세 인식 및 대미 전략적 노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은 2019년에 최고인민회의의를 통해 대미 장기전체제를 선언한 바 있

는데,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미 대선 이후를 염두에 둔 전략적 기조, 대미 협상 여지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연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핵개발 및 핵보유의 불가역적 완성 의지를 보여주는 ‘국가담론’을 통해 차기 미국 행정부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대의원 선거를 통해 1970년대생 후보위원의 대거 진입 및 당·정 요직 등용 등 인적 세대 교체가 대폭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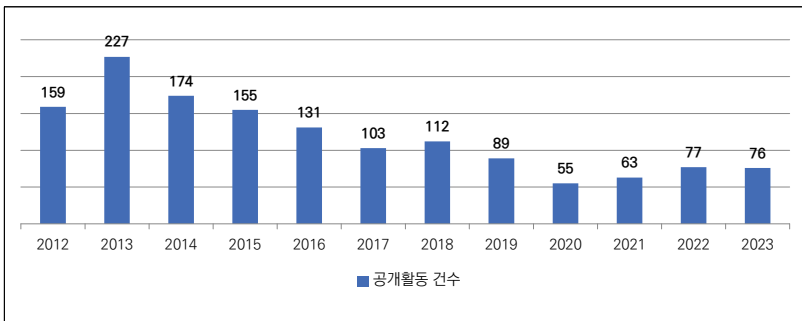
(대외정치) 중·북수교 75주년 중·북 고위급 외교 가능성, 시진핑-김정은 정상외교 미지수

10월 6일 중·북수교(1949) 75주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2023년 연말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올해 중·북수교 기념일에 대한 언급 여부, 2024년 중·북 사이의 ‘당 대 당’,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외교 및 교류가 활발해질지가 주요 관심사항이다. 중·북수교 기념은 최근 러·북 밀착에서 다소 위상이 위축돼 보였던 중·북관계가 2024년 어떻게 전개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중·북 우호를 보여주기 위한 최설희 외무상의 방중, 왕이 외교부장의 방북 등 고위급 방문 외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미국 대선(11월 5일) 한 달 앞서 있는 중·북수교 기념일에 맞춰 김정은의 방북 또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 등 정상급 외교 성사 여부다. 결론적으로 성사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2024년 러·북 간 무기거래를 비롯한 밀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차기 미국 행정부에게 중·북 밀착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중국은 정치적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통치활동 ①) 김정은 통치활동, 경제보다는 군사 및 주요 대내 결속 행사 참석 통한 선별적 이미지 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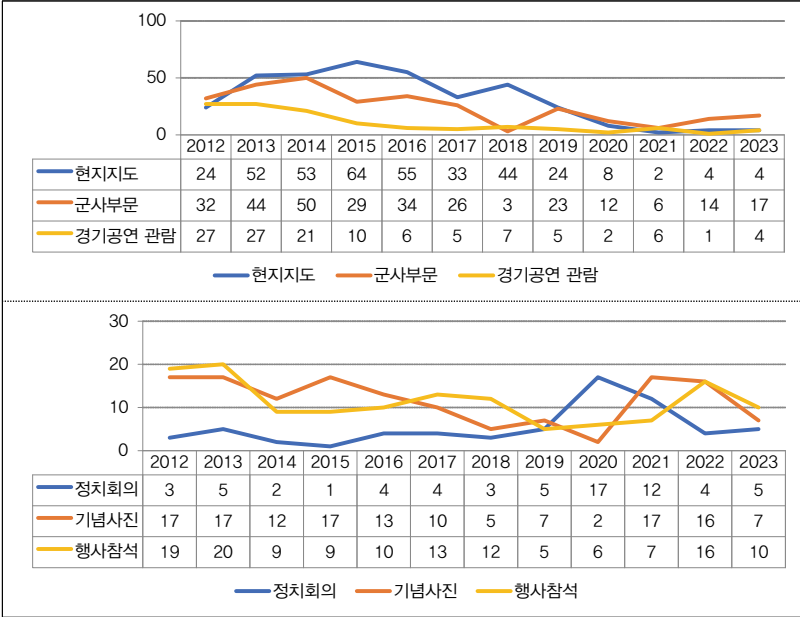
2024년 김정은 공개활동은 최근 60~80여 회에서 소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이후로 증가했던 당 중심 회의체 중심의 통치활동에서 현장을 방문하는 공개활동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러·북협력과 군사적 성과 과시 차원, 코로나 이후 민생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공개활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관심분야로 무기 개발 및 훈련 참관 관련 군사부문, 건설 주요 성과 부문, 주요 행사 참석을 통한 이미지 노출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 4년차 경제 챙기기는 주요 건설 준공식 참석 이외에는 내각총리의 현지요해에 맡길 가능성이 있으며, 오히려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 4년차 성과를 내는 활동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2〉 김정은 집권 이후 공개활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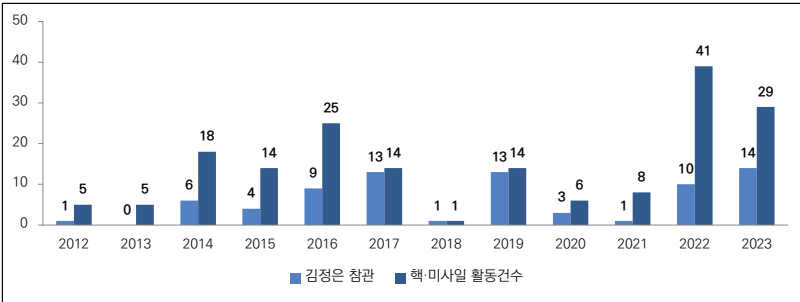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그림 IV-3〉 김정은 집권 이후 현지도, 군사부문, 경기 관람 등 활동 추이



출처: 저자 작성

〈그림 IV-4〉 김정은 집권 이후 핵·미사일 활동 건수와 참관 건수



출처: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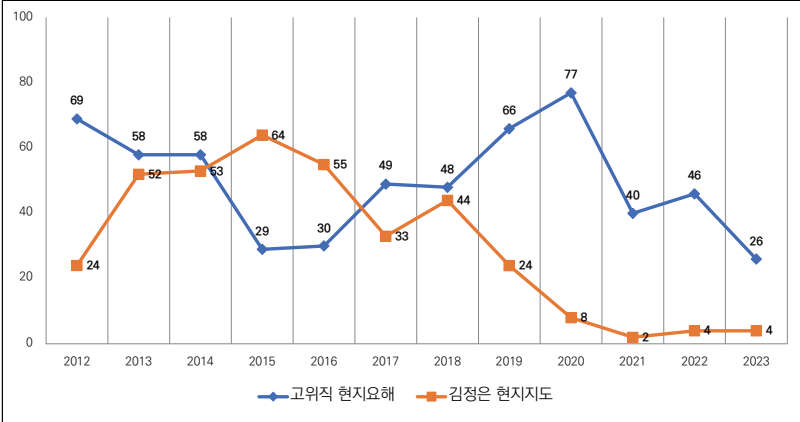
2012~2023년 12년간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은 총 227건으로, 이중 김정은 참관은 총 75회로 전체 핵·미사일 활동 중 김정은 참관

률은 40%였다. 최근 4년(2020~2023년) 동안 김정은 참관은 중요 무기 실험 성공의 경우만 선별적 참관을 하고 있으며 개발 중인 무기보다는 실전화, 작전화된 무기의 훈련에 주로 참관하고 있는 추세다. 2021년 이후 핵·미사일 활동에서 참관 공개 횟수를 줄인 배경에는 전략적·전술적 가치가 큰 무기 중심으로 대외 메시지 용도에 집중, 대내적 성과 과시가 필요한 타이밍에 집중하고 있다. 개발 프로세스 차원에서 보면, 개발 성숙기나 완료 시점에 있는 무기에 주로 참관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202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통치활동 ②) 김정은 경제 현지도 감소 및 고위 엘리트 현지요해 증가, 선별적 건설성과 방문 주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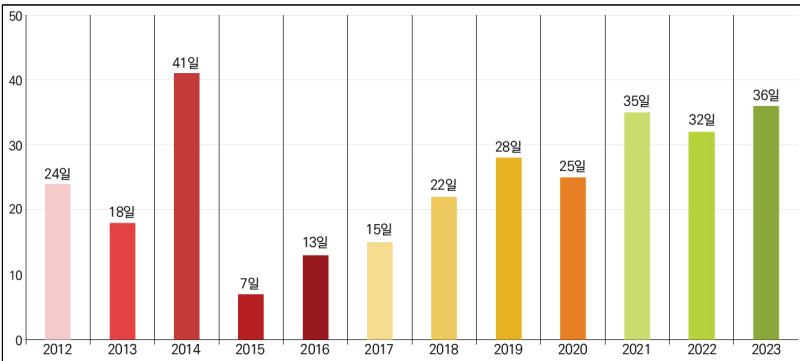
2024년에도 김정은 공개활동 중 경제부문 현지도는 감소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내각총리를 비롯한 고위 엘리트의 현지요해가 이를 대체하는 추세를 계속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이후 김정은의 경제부분 공개활동은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이런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가 미진한 가운데 경제관리의 내각책임제를 강조하며 경제에 대한 지도자의 책임에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대신 주요 건설 성과를 거두는 준공식이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공장·기업소의 선별적 방문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최고지도자의 경제부문 현지도가 왕성할 때 그나마 경제가 돌아갔으나 현지도 시 허위보고가 많아 현지도를 멀리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김정은의 공개활동 미식별 기간도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5〉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부문 현지지도와 고위엘리트 현지요해 추이



출처: 저자 작성

〈그림 IV-6〉 김정은 집권 이후 공개활동 미식별 최장기간



출처: 저자 작성

다. 북한 군사 분야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 지상용 전술핵무기 실전화 및 양산체계 진입
2023년 현재 국방력발전 5대 중점과업 포함 총 9개 무기체계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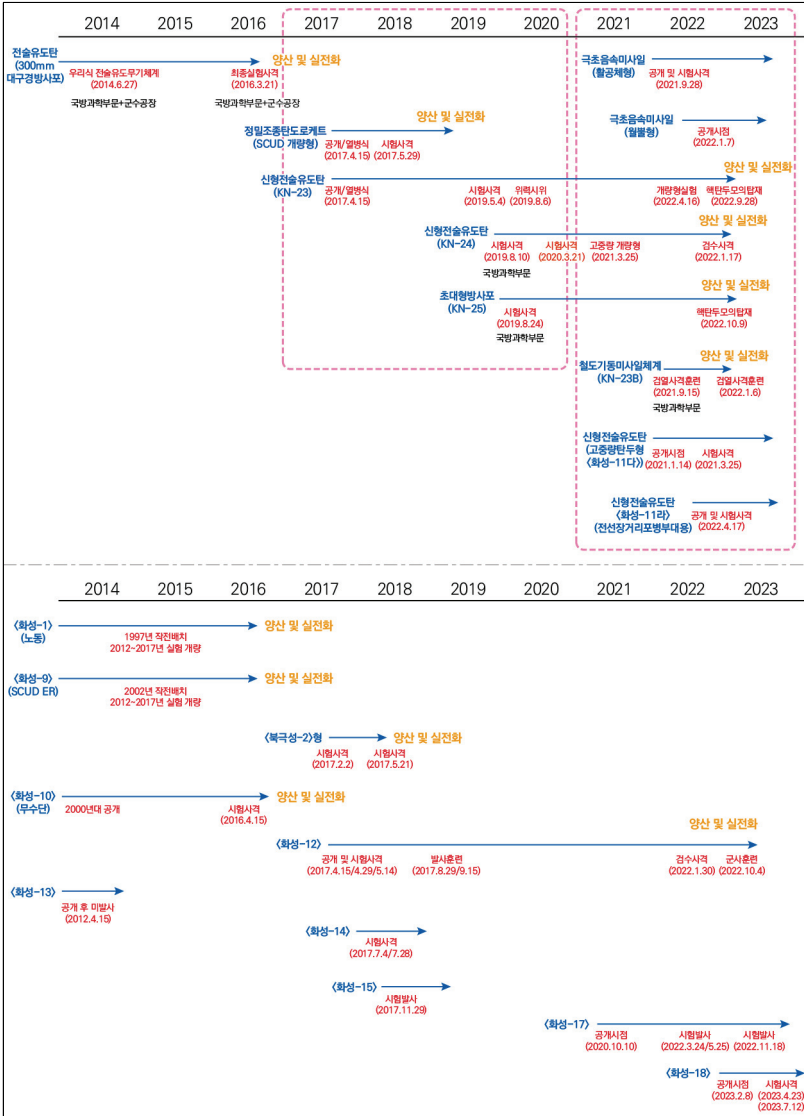
야에서 실험 및 개발을 마치고 실전화 및 양산체계 진입 과업은 ‘(지상용) 전술핵무기 실전화’에 그치고 있다. 초기 개발단계는 3개(정찰 위성, 극초음속미사일, 핵어뢰 및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BM) 등의 수중무기), 중간 개발단계이거나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은 3개(무인 정찰기·공격기, 고체연료형 ICBM/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 IRBM, SLBM), 개량 및 완성형 단계는 지상발사용 전술핵 미사일, 미확인 또는 미착수는 2개(초대형핵탄두, 핵잠수함) 등으로 추정된다.

〈그림 IV-7〉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 주요 과업 진행 상황

	2021	2022	2023	2024	2025
· 소형정찰화/전술무기화	KN-23, 24, 25 실험/개발	신형전술유도무기(개량형) 운용훈련	전환순항미사일 <확산-1, 2>형 실전화/군사훈련	· 소형화/무동화 ○ · 변칙비행 ○ · 기동성 ○ · 다중화 ○	
· 초대형핵탄두		미확인(확성-17, 18급 탄두/핵실험 필요)		· 폭발력 실험 無 · 핵탄두 실험 (확성-17, 18 외형 공개)	
· 극초음속 미사일		<확성-8>형 실험/개발		· 속도 미비(마하 5) · 실전해지 無 · 양산 無	
· (수중/지상) 고체연 ICBM		고체연료 엔진 실험	<확성-18>형 실험/개발	· 재진입 기술 미지수 · 거리확보 ○ · 다탄두 미지수 · 이동식 ○	
· 핵잠수함/수중무기			전술핵공격잠수함 (해일-1, 2)형 전략수함 수중용(SLCM) 실험/개발	· 핵잠수함 無 · 다궤 전술핵공격잠수함 운용 불확실 · 핵어뢰 폭발력 및 운용력 미지수	
· SLBM		실험/개발		· 잠수함 탑재 발사 능력 미지수 · 발사용 잠수함 확보 미지수 · 거리확보 일정 수준 도달	
· 군사 정찰위성		실험/개발	1차, 2차 실패	· 방사체 부분리 및 비행 능력 미확보 · 데이터 송수신, 카메라 조정능력 미지수 · 내구력 및 수명 한계	
· 무인기		무인기 날아 실험/개발	<셋별-4, 9>형 운용훈련	· 초도 비행능력 확보 · 정찰 및 고고도 공격능력 미확인 · 양산 및 실전화 無	

출처: 저자 작성

〈그림 IV-8〉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별 개발 및 실전화 공개 양상



출처: 저자 작성

(정책기조) 국방력 발전 5개년계획 4년차, 전술핵·전략핵·정찰위성 개발 지속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했던 중점과업 중 2023년에 전술핵무기 실전화, 15,000km급 및 고체연료형 ICBM 발사, 해상 기반 전략순항미사일, 핵어뢰 등 수중무기 개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등에서 소기의 성과를 보인 바 있다. 2024년에는 아래 무기체계 개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1) 괌 라인을 타격대상으로 한 고체연료형 중거리미사일 실험
- (2)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
- (3) 잠수함 개조 및 SLBM 발사
- (4) 해상 기반 전술핵무기 실전화
- (5) 공대지 및 공대공 미사일 개발(공대지용 극초음속미사일 포함)
- (6) 무인 정찰기 및 공격기

(무기개발) 지상 전술핵 배치 이어 해상 및 공중 기반 전술핵 플랫폼 다변화 행보 가능성

2024년 북한은 전술핵 플랫폼의 다종화에 상당한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해군절, 공군절 행사에 참석, 해군력 및 공군력 발전과 현대화를 위한 중장기 구상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지상발사용 전술핵무기 미사일은 일정한 다종화를 통해 실전화를 추진하고 있는바, 절대적 열세에 있는 해상과 공중에서의 전술핵 플랫폼 구축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자위-2021’ 국방발전전략대회에서 공개된 무기 중에는 지상 및 해상 발사용 전략

순항미사일(SLCM), 핵어뢰 이외에도 전투기에 장착하는 신형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도 공개한 바 있다. 미사일 개발 중 가장 어렵다는 공대공 미사일을 비롯해 러·북 간 일정한 기술 지원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러·북 군사협력 ①) 러·북 간 공대지 극초음속미사일 및 공군현대화 관련 협력

2023년 9월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당시 공대지 극초음속미사일 킨잘(Kinzhal, Kh-47M2), Su-31 및 전략폭격기 생산공장을 방문하였다. 데니스 만투로프 러시아 산업통상부장은 9월 15일 러시아는 항공분야를 포함한 여러 산업 부문에서 북한과의 협력 잠재력을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공군현대화와 관련된 러·북 협력이 일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중에서 주목할 부분은 극초음속 미사일 분야다. 킨잘은 현존하는 요격체계로는 요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러시아가 선전해 온 무기로 일종의 게임 체인저로 간주되어왔다. 킨잘을 장착할 수 있는 전투기 모델은 Su-31, Su-35 두 기종인데, 북한의 주력 기종인 미그-29에는 장착이 어렵다. 따라서 공군현대화를 위한 러·북 군사협력 중 전투기 및 공중용 미사일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주시할 필요가 있다.

(러·북 군사협력 ②) 북한의 러시아 군수생산 플랜트 공급과 러시아의 정찰위성 기술협력 가능성

북한의 러시아 지원은 탄약, 포탄 등 소모적 전시물자 이외에도

이것을 생산하는 플랜트 공급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대응하여 부정기적 전시물자 공급이 아닌 생산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북한에서 조립 가능한 플랜트를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 러·북 간 컨테이너 이동을 통해 조립 가능한 플랜트 공급 부분을 염두에 두고 주시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대북한 지원에는 군사정찰위성 2호기의 기술적 진전을 위한 자문, 부품지원, 실험공간 제공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2024년 4월 한국의 정찰위성 2호기 발사 일정 등 한국의 정찰위성 개발 프로세스와 경쟁하는 구도를 통해 ‘이중기준’ 불가론을 제시하며 정당성을 확보하는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의 군사정찰 위성 지원은 향후 러·북의 중장기적 전략적 일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러·북 군사협력 ③) 공군현대화 및 해상·수중 무기 기술 협력 가능성
공군과 해군 분야에서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1) 노후화된 기종 및 함정의 수명 연장 및 개보수

공군의 경우 제일 급한 부분은 보유하고 있는 미그-23, 미그-29의 수명 연장과 기능 개선이다.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그-29 40기 중 정비 불량, 기체 결함으로 실제 사용 가능한 것은 16대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BVR(Beyond Visual Range)과 같은 시계 외 공중전 능력은 부재하다. 북한이 구소련으로부터 미그-29를 도입했을 때, 소련과 미그-29의 유지, 보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약은 구소련을 계승한 러시아도 승계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지금도

꾸준히 북한의 미그-29는 유지, 보수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조종계기판도 미그-29smt의 글래스 콕핏으로 업그레이드된 것을 공개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은 2014년 김정은이 참관한 미그-29 훈련에서도 확인되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존 보수 유지 이외에 무기체계 업그레이드를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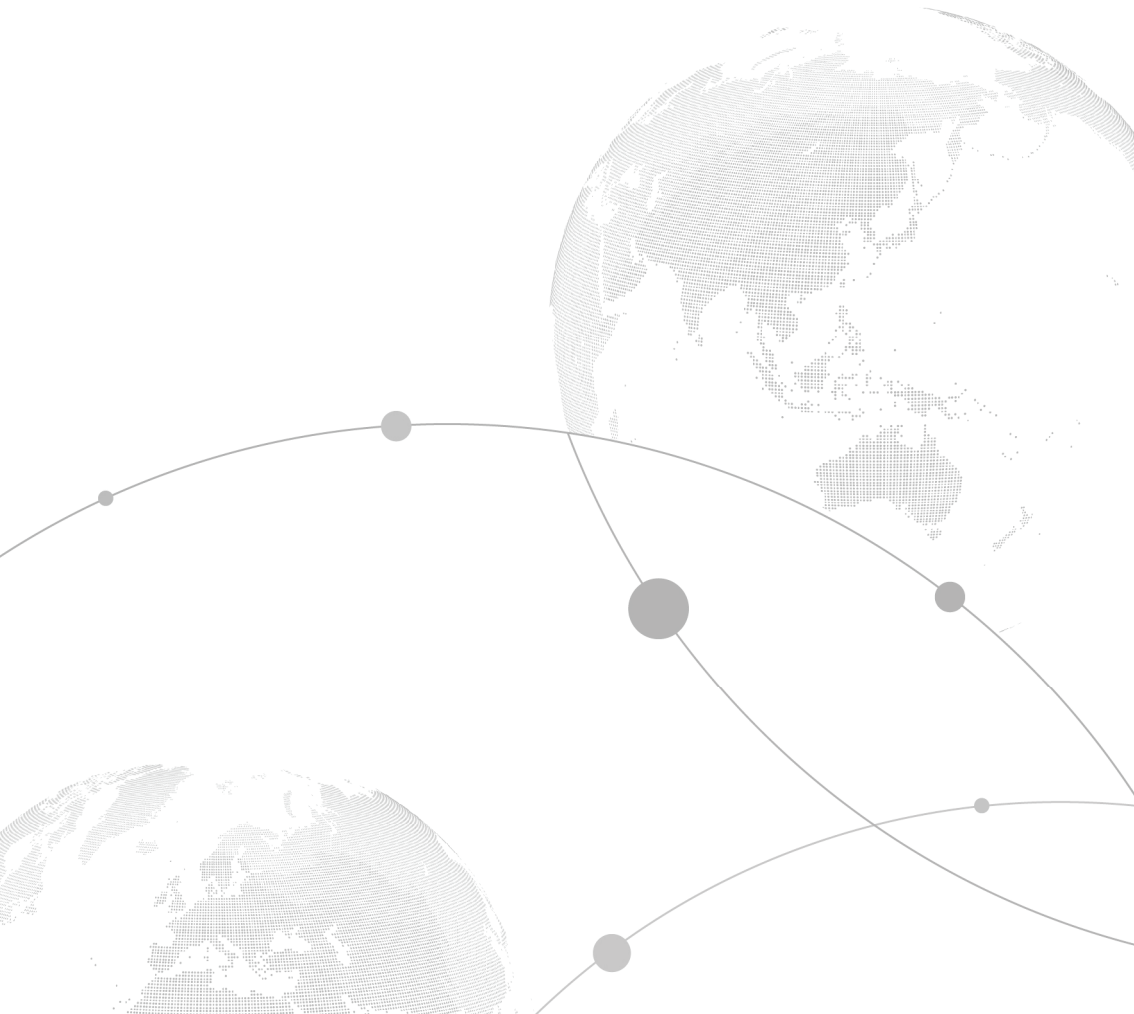
(2) 러·북 협력을 통한 공군과 해군의 무기체계 업그레이드

공군의 경우 전투기 중앙처리장치(CPU) 교체 및 용량 개선, 레이더 교체 통한 기능향상, 디스플레이 교체 등이 가능하다. 같은 기종이지만, 소프트웨어에 따라 무장력이 달라질 수 있어 조종능력과 무장력을 개선하는 데 일정한 기술협력이 가능해 보인다. 해군 역시 수상함 및 호위함 레이더 능력을 개선하고 무장력을 높이는 기술협력이 가능하다.

(3) 전략폭격기 및 전투기 등을 공대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술 협력을 할 가능성

- 홍 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V. 북한 대외 및 대남전략



1. 2023년 정세 평가

(대외전략) 신냉전 대결 구도에 편승하는 ‘진영외교’ 및 ‘반미’ 국제 연대 강화

2023년 북한의 대외정책은 신냉전 대결 구도 심화에 편승하는 ‘진영외교’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되었다. 동북아와 국제 지정학 무대에서 펼쳐지고 있는 미·중 및 미·러 간 갈등의 강대국 정치에 편승했다. 즉 진영 고착화에 기대어 중·러와의 군사·경제·외교적 공조를 강화하여 제재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핵무력 고도화에 집중하면서 한·미동맹을 대상으로 강압 수위를 높여갔다.

2023년 북한 진영결속 외교에서 특히 두드러진 장면은 러시아와의 밀착이다. 7월 쇼이구 국방장관이 이끄는 러시아 사절단이 방북하여 김정은을 예방하고 ‘정전협정기념일(소위 북한의 전승절) 야간 열병식에도 참석했다. 9월 12~17일간에는 김정은이 직접 러시아를 방문하여 군사 관련 시설을 돌아보았다. 13일에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동했다. 러·북 간 군사협력 증대 및 기술 이전 방안 등 ‘공개하면 안 되는 민감한 영역’에까지 심도 깊은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방북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9일 김정은과 만나 ‘쌍무적관계’ 확대를 논의하고, 최설희 외무상과의 회담에서는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 정세’에 대한 공동행동 강화를 합의하며 반미 공동 전선 구축에도 합의했다.

러·북 밀착은 이해관계가 합치된 결과다. 핵무기 고도화에 필수적인 정밀 기술 도입에 목말라 있는 북한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의 장소모전으로 포탄 등의 군수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러시아

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5개년계획 완성에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 제14기 제9차 최고인민회의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58조에 조문화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인공위성 제작과 발사, 그리고 핵투발 수단 고도화 등에 필요한 관련 정밀 기술 획득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곤경에 처한 러시아의 상황을 활용하여 인공위성, 핵탄두 대기권 재진입, 정밀 SLBM 개발 등에 필요한 관련 군사기술을 이전받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진력하는 모습이였다. 11월 21일 발사된 인공위성 ‘만리경-1’호가 지구 저고도 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기술진의 밀착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러·북 간 군사기술 이전 및 군사 공조 밀약이 이미 가동되는 정황이 드러난 사태다. 이와 더불어 만성적인 고립과 경제난에 봉착해 있던 북한은 한·미·일 삼각 동맹의 외교적 압박과 국제사회 대북 제재 포위망 돌파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목표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러시아로부터 경제·외교·군사적 자원을 획득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전통적 동맹관계에 있는 북한과 중국 간에도 경제 교류가 확대되고 외교 협력도 점증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점차 지원을 확대해나가며 북한의 경제난 감소에 힘을 보탰다.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대북 추가 제재 논의를 무산시키는 등 외교적 보호에도 팔을 걷어붙이며 나서는 모습이다. 기념일 축하 및 친서 교환, 지도급 인사 방문 등으로 친선을 다졌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중·북 간에는 아직 미묘한 온도 차가 존재한다. 북한은 신냉전 격화와 ‘반미 국제연대’ 강화를 거듭 강조하며 중국의 더욱 강경하고 적극적인 태세 전환을 직·간접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전략적 판단에 따라 미국과의 갈등 수

위를 신중히 조절해 나가길 원하는 중국은 일정 거리를 두는 모습이 었다. 의도하지 않은 연루를 꺼린 것이다. 급속히 진행된 북한과 러시아 간 밀착의 이면에는 중국의 지원 확대를 압박하는 북한의 전략적 의지도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중·러 간 ‘줄타기 외교’도 재가동된 상황이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푸틴-김정은 간 회담 전 9월 12일에 정례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의 방러는 러·북 간 ‘안배(安排)’라며 거리를 둔다. 북한의 의도에 쉽사리 휘말리지 않으면서, 미·중, 중·러, 미·러 간 강대국 정치의 향방에 따라 북한과의 관계를 관리해 나가겠다는 속내를 비친 것이다. 대미관계에서 북한은 2022년에 이어 18차례의 탄도미사일과 인공위성 발사실험 등을 감행하며 압박 노선을 고수했다. 비록 한·미를 상대로 극단적 대치 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의 초대형 도발을 감행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대화 제의를 연이어 거부했다. 중·러와의 군사·외교적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무시하는 크고 작은 도발 행위를 결행하며 대미 강압 태세를 견지했다. 바이든 정부를 상대로는 비핵화 문제 등에 관한 유리한 협상을 전개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한 듯 보인다.

(대남전략) 尹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전략적 무시…韓 사회 침투와 공작 강도 높여

대남전략은 의견상 동북아 신냉전 전개와 진영 외교의 틀 내에서 종속변수로 취급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러·북 현상 변경 세력에 대항하는 한·미·일 삼각 동맹의 공조 강화를 진영대결의 관점에서 비

난하는 데 주력했다. 한국의 담대한 구상 제안을 애써 도외시하며 대남 ‘전략적 무시’ 전술로 대응했다. 그러나 2023년 문화교류국 침투 공작으로 결성된 지하공작망의 잇따른 적발이 여실히 보여주었듯이, 한국 정치·사회 부문에 대한 침투와 영향력 공작의 강도를 높였다. 보수 성향 한국 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 하락과 대중적 소요 발생을 유도하는 국론분열과 남남갈등 확대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북한이 원하는 한국 내 정치환경 조장에 집중했다.

2. 2024년 전망

가. 北, 위기 고조 전략으로 한반도 열전화 기도 … 중·러의 한반도 정세 연루 유인할 듯

2024년 북한 대외·대남정책은 현상 질서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세력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며 반미·반자유주의 진영결속 외교에 더욱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특히 자유주의 진영 각국의 주요 선거 일정에 맞춰진 모험주의적 외교 행보와 군사 도발로 한반도 정세 위기 고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도발의 양태나 강도는 향후 전개될 미·러, 미·중 대립의 전개 양상과 갈등 수위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대남전략은 대외전략 추진의 큰 그림 하에서 대미 강압 강화, 그리고 중·러의 한반도 개입 및 연루 확대를 노리며 전개될 것이다.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선거 영향력 공작과 남남갈등 조성에도 나설 것이다.

진영결속 외교 강화로 신냉전 편승

첫째, 북한은 ‘진영(결속) 외교’를 더욱더 거세게 밀어붙이며, 미국과 대립하는 중·러를 끌어들이며 평양의 이해 관철에 활용하는 ‘동맹 연루’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북한은 미국과의 타협을 통한 ‘평화 외교’로 핵무장 기정사실화와 한반도의 현상 변경을 꾀했다. 그러나 동맹 체제 복원과 지도국 지위 복구로 자유주의 국제질서 재정립을 추진하는 바이든 정부의 등장으로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유화적 책략이 한계에 봉착하자 북한은 핵무력을

고도화하면서 전지구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신냉전 대립 구도에 편승하여 대미·대남 강압을 강화하는 ‘북한다운’ 대외전략으로 방향을 선회한다. 신냉전 구도 심화를 틈타 북한은 한반도 현상 변경 목표 달성을 위해 강대 동맹국들의 군사·외교적 관여와 개입을 한반도 지정학 게임에 끌어들이는 동맹 연루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할 것이다.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는 미·러, 미·중 간 대립 구도 심화를 신냉전이라 규정해 왔고, 이에 편승(bandwagon)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누차에 걸쳐 표출해 왔다. 2023년은 북한 진영 외교 편승 전략이 구체적 형태로 전개되었다. 2023년 9월 26~2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도 김정은은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일본, ‘대한민국’과의 3각 군사동맹 체제 수립을 본격화함으로써 전쟁과 침략의 근원적 기초인 ‘아시아판 나토’가 끝내 자기 흥체를 드러냈다”라며 “미국과 서방의 패권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가일층 강화해나갈 것”을 천명한다. 또한 반미 국제연대의 첩병을 자처하면서 신냉전 갈등 증폭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속에 미국과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 급속도로 진행된 러·북 간 군사협력과 기술 이전은 신냉전 기류에 편승하려는 북한의 전략적 선택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러·북 밀착이 중국의 암묵적 동의 없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관점에서 중·러·북 삼각동맹의 진영결속이 점차 굳어져 가는 모습이다.

진영의 결속을 추진하는 북한의 전략적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북한은 중·러의 경제적·외교적 지원을 확보하여 대북 국제제재의 완결성을 훼손하고 만성적 경제난과 식량난을 버텨낼 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 2022년을 지나며 중·북 간 무역과 러시아로부터의 지원 물

자 유입이 증대되는 추세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중·러는 북한의 핵무력 증대와 제재 위반 행위를 옹호하며 추가 제재를 가로막고 있다. 미국 주도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강력한 도전장을 제기한 중·러와의 군사적 결착과 외교적 공조 강화를 통해 한·미·일 등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를 향한 외교적 압박에 대항해왔다. 이를 통해 대미·대남 강압 전술을 ‘안전하게’ 구사하며 핵 및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핵무력 고도화계획 추진에 필수 불가결한 정밀 군사기술의 이전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실패를 거듭하던 인공위성 발사에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만리경-1’호의 궤도 안착은 러시아로부터의 신속한 기술 지원 없이 성사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2021년 제8차 당대회를 통해 개정된 당규약 서문에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 부분을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으로 변경하며 ‘남조선혁명’을 경유한 평화통일 방안보다 군사력에 기초한 무력 통일을 보다 현실성 높은 대안으로 강조하기 시작했다. 2022년의 「국가핵무력정책에 관한 법령」에 이어 2023년 개정헌법에까지 ‘령토완정’을 조문화하였다. 이러한 의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력, 특히 핵전력 고도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관련 정밀 군사기술의 도입이 절실했다. 이 점에서 군사기술 도입 문제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공개하면 안 되는 민감한 영역’에 관한 9월 푸틴-김정은 간 군사 공조 합의는 진영결속 편승 외교 전략 추진의 성공적 성과로 자평할만한 결과다. 2024년 진영결속 외교가 더욱 강화될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게 만드는 사태다.

중·러 간 기회주의적 줄타기 외교

둘째, 대외적 행보의 자유를 확보하면서 중·러 양국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수확하기 위해 애용되었던 북한의 전통적 동맹외교 전략인 줄타기 외교가 재연될 전망이다. 비록 역내 현상 변경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이지만 진영 내에서의 주도권 다툼과 비용의 분담, 그리고 구체적 세부전략 추진 방향 결정에 있어서 양국의 입장이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 미묘한 균열과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양국 간 균열과 갈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등거리 줄타기 외교를 구사하여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양국 간 '시계추 외교'를 통해 실익을 추구하는 외교 행보를 보여왔다. 국력 격차로 진영 강대국들과 비대칭 동맹(Asymmetric Alliance)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북한으로서는 중·러 중 일방의 국가에 대한 의존도 심화가 대내외적 정책 결정과 행동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다. 중·러 양국에 있어 동아시아에서 전략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닌 동맹협력국은 북한이 거의 유일하다는 지정학적 이점을 최대로 활용하여 불균등한 동맹관계의 취약성을 극복하려는 대외전략이 바로 줄타기 시계추 동맹외교다. 중·러 양국과 미국 간 갈등과 대립이 진영 구도로 고착된다는 조건 아래에서 진영 내 중·러 간 균열과 이견이 돌출되면 더욱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전략이다. 1960~70년대 냉전 시기 북한은 중·러 간 등거리외교를 통해 외교적 자율성을 보존하면서도 양국으로부터 자원과 지원을 수취할 수 있었다.

탈냉전 이후 소련의 붕괴와 미국 단일 패권 시대가 도래하면서 북한의 기회주의적인 줄타기 등거리외교 전략은 퇴색한다. 그런데 동북아에서 신냉전 구도의 심화는 바로 줄타기 외교가 부활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중·러는 수정주의 동맹국들이지만 지정학적·전략적 환경의 차이에 따라 이견과 불협화음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2023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양국의 입장 차는 전형적 사례다. 우크라이나에서 장기소모전의 진창에 빠져든 러시아로서는 중국의 적극적 관여와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의 강력한 외교·경제적 대응과 자국의 경제난으로 미국과의 갈등 수위 조절이 필요했던 중국은 침략 전쟁 중인 러시아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만은 없는 상황에 부닥친다. 오히려 APEC 참가를 위해 방미한 시진핑 주석은 11월 15일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고위급 군사 회담 재개, 마약 제조·유통 방지 협력 등에 합의하는 등 올리브 가지를 흔드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

이러한 중·러 양국 간 잠정적 이견과 외교적 간극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2023년의 북한이었다. 러시아와의 긴밀한 군사 공조를 통해 러시아의 경제적 지원과 군사기술 이전을 얻어낼 수 있었다. 중국의존도 심화가 초래할 수 있는 자율성 약화라는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다. 중국에 대해 대북 지원 확대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이중 포석을 구사할 수 있었다. 2024년에도 북한은 줄타기 공식을 더욱 전략적으로 운용할 것이다. 이를 통해 양국으로부터 핵무력 고도화와 대미·대남 압박에 필요한 자원과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국제제재와 외교적 압박의 실효성을 훼손하기 위해 진력할 것이다.

대미·대남 위기 고조 강압 전술 가시화

셋째, 2024년 예정된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을 겨냥한 위기 고조용 군사 도발 가능성과 강력한 대남 영향력 공작 전개다. 북한은 한반도 안정을 볼모로 지정학적 존재감을 재각인시키기 위해 위기 고조용 도발을 애용해 왔다. 위기 고조 전략은 한·미동맹을 강압하고 동맹국들의 지원을 각출하는 데도 유용했다. 관련국 모두에게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화(화약과 점화)라는 잠재적 위험성을 강매하는 북한의 '위기 비즈니스'가 단지 어제, 오늘의 단편적 행사가 아니었다. 그러나 진영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 도발과 위기 고조는 전지구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대결 양상을 한반도로 전이시켜 동북아 지역을 '열전지대화' 할 수 있는 극단적 위험성을 지니게 되었다. 더욱이 핵무력이 확대되면서 자신감을 얻은 북한이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더욱 파급력이 크고 대담해진 도발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지난 9월 26일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2023년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군사 안보 정세가 핵전쟁 문턱에 더욱 가깝게 다가선 위험천만한 해'였으며 '핵전쟁 참화'를 운운한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의 위협을 단지 빈말로 여길 수만은 없다. 증대된 핵 능력을 발판으로 삼아 가시성 높은 도발 등을 기획하며 더욱 위험해진 강압 외교 캠페인을 전개할 개연성이 커진 이유다.

나. 北, 2024년 4월 韓 총선, 11월 美 대선 개입을 위한 대형 도발 기획 가능 … 대남 정치심리전 및 가짜뉴스 살포 등도 경계 필요

2024년 줄줄이 예정된 주요 관련국들의 선거 달력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감행 동기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1월 대만 총통선거, 3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선, 4월 한국 총선, 11월 미국 대선으로 촘촘히 잡힌 선거 일정은 단지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의 지정학적 이해타산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다. 북한의 도발이 진영 전체의 목인이나 심지어 보이지 않는 공조 하에 감행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대미 압박 목적의 핵 능력 과시, 즉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이나 신형 투발 수단 공개 등에 치중해 온 북한이었다. 선거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 즉 가시적 파급효과를 충격적으로 발산할 수 있도록 ‘대규모 재래식 도발’ 또는 ‘대규모 미사일 동시 발사 세례나 익명의 테러 등 비대칭 공격’ 등을 감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제재로 9·19 군사합의 일부의 시행을 유예한 한국에 대한 대응으로 전면 폐기를 선언한 북한의 행태는 대규모 비대칭 도발을 사전에 정당화하기 위한 신속한 선택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대규모 재래식 도발은 중·러에 지나친 위험 부담을 줄 수 있고, 한·미동맹의 단호한 대응을 촉발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 총선을 앞둔 2024년 초부터 항시적으로 경계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오프라인 군사 도발 못지않게 선거를 앞둔 한국 내부정치에 영향

력을 투사하고 정치적·사회적 혼란과 국론 분열을 유발하기 위해 대규모 사이버 공격과 침투 공작,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정치심리전이 전개될 수 있다. 2023년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도와 지령에 따라 암약하던 지하공작망에 대한 일련의 검거 사건들은 예시적이다. 직간접적으로 한국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한국 정부의 안정성을 허물기 위해 전개되어 온 북한의 다양한 영향력 공작과 남남분열 작업 실태가 확인된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는 더욱 규모가 큰 대남 영향력 공작 및 정치심리전이 전개될 수 있다. 온라인·오프라인 동시다발 테러 감행 등의 한국 내부의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기 위한 대형 사건과 사고를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북한판 하이브리드전’에 대비해야 한다. 11월 중국 정부가 관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언론사 위장 가짜뉴스 배포 사이트들이 대거 적발된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경유하여 기사 형식 가짜정보와 뉴스들이 대량 유포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친중 여론 등을 조성하기 위한 영향력 공작의 일환이다. 한국 주요 선거 등을 앞두고 북한과 중·러 등이 영향력 공작 효과 극대화를 위해 국제공조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 다른 유형의 진영결속과 공조가 진행될 수 있다는 말이다.

3. 정책 제언

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일 삼각공조 체제 활성화 필요

무엇보다도 확장된 핵전력을 토대로 담대한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북한을 억제하고, 도발이 강행되더라도 실효적으로 응징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동시에 의도치 않은 확산(inadvertent escalation) 발발 가능성도 차단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한국의 독자적 대북 억제 능력 향상은 물론, 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일 삼각공조 체제 활성화, 그리고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도 총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 2022년 이후 현 정부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실질성을 회복했다. 또한 ‘한·미안보협의회의(ROK-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확장억제전략협의체(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EDSCG)’ 등 동맹협의체 기능을 활성화했다. 2023년에는 ‘워싱턴 선언’과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선언 등을 통해 미국의 지지를 공고히 했다. 핵협의그룹(NCG) 신설이나 미 핵 자산 정례적 가시성 증진,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및 확장억제 재보장 확약 등을 얻어내는 등 전임 트럼프 대통령 시절 추락했던 미국의 방위 및 핵우산 공약의 신뢰도를 회복시키는 데 성과를 거두었다. 후속 조치들을 더욱 구체화, 정례화, 세분화하면서 미국의 공약을 되돌릴 수 없는 제도적 확약으로 안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북한의 오판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다음 대선을 통해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복원보다는 고립주의 축소와 협의의 국익 추구에 방점을 두는 새로운 대통령의 등장이라는 ‘미국 발 리스크’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리

스크가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한 플랜-B도 구비할 필요가 있다.

대북 제재망의 정상 가동과 국제적 협력 강화

북한 핵무력 고도화 프로젝트의 이행 부진과 지체를 위해 대북 제재망의 정상 가동을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제재의 강화는 어려울지라도 북한의 핵무력 확대를 지원하는 국가들에 대한 2차 제재 및 한·미·일과 유럽의 독자 제재 강화를 견인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방식 비핵화 원칙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제재 실효성을 허무는 중·러 등의 국제질서 교란 행태를 규범적으로 제약할 필요가 있다.

4월 韓 총선과 美 대선…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대남 침투 및 영향력 공작에 대비

한국 총선과 미 대선 등에 영향력 행사를 노리며 감행될 수 있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대남 침투 및 영향력 공작에 대비하여야 한다. 먼저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또는 비대칭 도발의 감행을 억제하기 위해 방어·응징 태세를 재점검하면서 비상 대응 및 반격 훈련 등을 통해 응징 능력과 의지를 현시적으로 과시할 필요가 있다. 중·러에도 북한의 대규모 도발이 초래할 수 있는 후과와 한반도 위기 고조 및 불안정 증폭 상황이 초래할 악영향을 사전 인지시켜 북한 통제에 노력하도록 간접적으로 주문해야 한다. 미국과의 충분한 사전 합의를 통해 비상시 한·미 간 이견과 갈등 발생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현

실성 있는 도발 대응 시나리오들을 발굴하고 대응 작계의 구체성도 확보하여야 한다.

북한의 대남 정치 분열 및 혼란 조성 공작과 선거 영향력 행사 작업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도 준비해야 한다.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이 초래할 수 있는 공안 공백과 마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금융·언론·사기업 등 기관들에 대한 총체적 사이버 침공에 대해서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민주적 질서 수호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국론 통합을 위한 노력은 가장 근본적이지자 기초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우방국들과의 반침투·반공작 정보 및 기술 공유를 위한 국제적 연대의 제도화도 요구된다. 한국을 겨냥한 내부 침투, 영향력 행사, 가짜정보 살포, 여론 조작 공작 공동 수행 등 수정주의 국가들의 국제적 공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 김진하(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VI. 북한 경제의 대내외 여건 평가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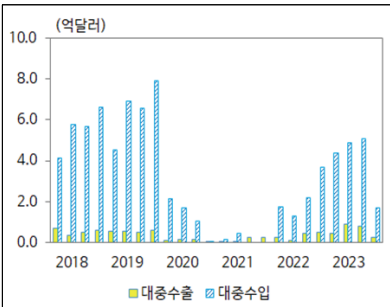


1. 2023년 정세 평가

점진적 무역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경봉쇄 이전 대비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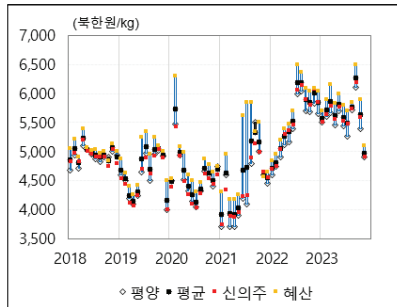
2023년 북한 경제는 점진적 무역 확대에 힘입어 부분적인 회복세를 보였으나, 이는 국경봉쇄 기간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기저효과’이며, 제재 장기화로 인한 경기후퇴는 지속되고 있다. 2020년 북한 경제는 극단적 국경봉쇄의 여파로 1990년 중반 이후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4.5%)을 기록하였으나, 2022년부터 시작된 무역재개 움직임이 올해에도 지속되며 최악의 상황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수입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경공업은 무역재개가 지속되며 전년에 이어 양호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국경봉쇄 기간 급등했던 수입소비재 가격도 공급부족이 다소 완화되며 하락세로 전환한 것으로 관찰된다. 그러나, 2023년 북한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의 대중무역 규모는 여전히 2018~2019년 대비 낮은 수준이며, 시장가격도 높은 수

〈그림 VI-1〉 북한의 대중무역(분기별)



출처: 한국무역협회, <<https://stat.kita.net/>> (검색일: 2023.11.30.).

〈그림 VI-2〉 시장 쌀가격(월별)



출처: 데일리NK(11월 말 기준)

준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재 장기화의 악영향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자본재 수입에 대한 금수조치는 제조업 전반의 가동률 저하를 초래, 산업 간 연관관계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농업·건설업 집중과 경제관리의 중앙집중적 통제 강화

2023년 북한당국의 경제정책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경제발전의 측면에서는 농업, 건설업과 같이 민생과 직결되면서도 국내자원으로 가시적인 성과 달성이 용이한 산업에 자원배분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농업·농촌 발전에 대한 예산지출을 증가시키는 한편, 올해에는 비료와 곡물 수입을 확대하고 농촌 살림집 등 건설업에 집중하고 있다. 둘째, 경제관리의 측면에서는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중앙집중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곡물 등 소비재 유통 전반에 대한 개입뿐만 아니라 재정금융 부문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는 모습이다. 2021년 북한은 사회주의상업법과 양정법을 개정하여, 소비재 유통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공급(배급)뿐만 아니라 판매로까지 확장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정책변화는 시장이 담당하던 소비재 유통에 국가가 부분적으로 개입하면서 경제 전반에 대한 통제를 확대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재정법 개정(2021년), 대부법 제정(2023년)과 같은 제도 변화도 제재 장기화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 미상환채무 증가 등에 대응하려는 시도로 이해된다. 즉,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재정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미상환채무 처리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역할과 임무를 규정할 필요성이 증대할 결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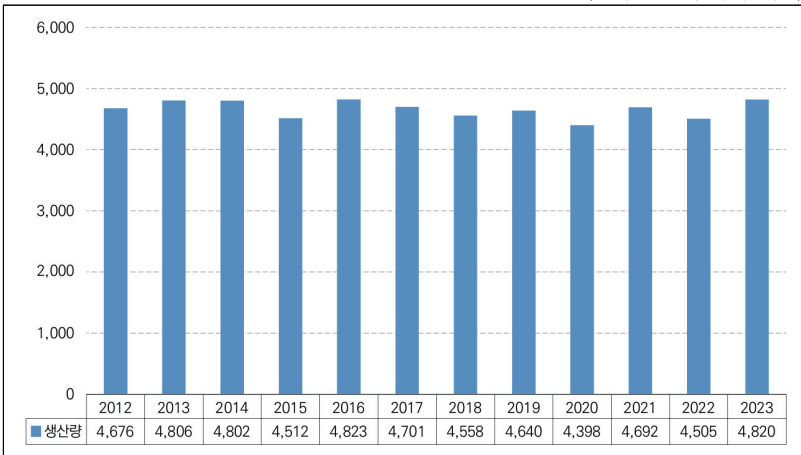
국내 곡물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만성적 식량부족 지속

식량(알곡) 생산은 제8기 제6차 당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경제분야 12개 ‘중요고지’ 중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할 만큼 올해 북한은 식량 증산을 위해 총동원체제를 가동하였다. 농촌 건설 및 농업 생산 부문의 국가 예산이 전년 대비 14.7%가 증액되었고, 제8기 제7차 당 전원회의를 통해 관개 체계 개선 및 영농물자를 군수물자와 같이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정책 방침이 세워짐으로써 농업 생산 여건이 전년 대비 나아졌다. 농업에 대한 지도관리에서 중앙집중적 통제가 강화되면서 기존에 농장의 경영 자율성을 허용한 포전담당책임제는 후퇴하고, 생산계획부터 영농물자 및 노력의 공급, 수확과 수매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가 전면에서 나섰다.

기후 조건과 비료 투하량은 북한의 식량 생산량을 결정하는 주요

〈그림 VI-3〉 김정은 정권의 곡물생산량 추이

(단위: 천 톤, 정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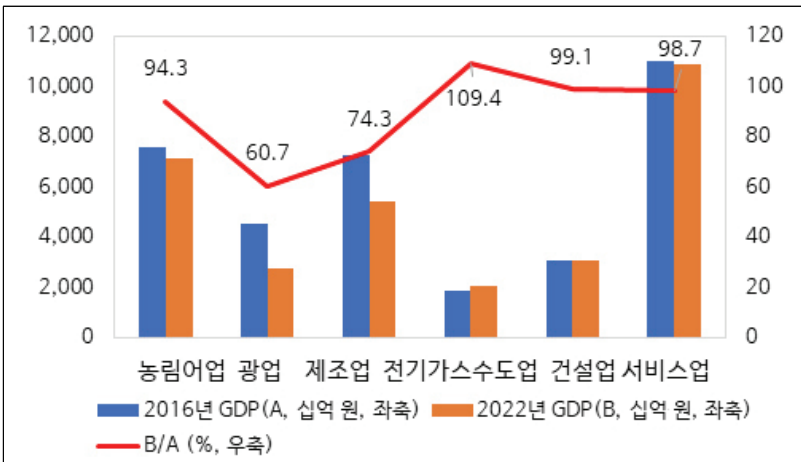
출처: 농촌진흥청 자료 참고하여 저자 작성

요인으로 황해남·북도, 평안남·북도, 남포시 등 서해 곡창지대에 자연재해가 거의 없었고, 전년 대비 비료 수입량(특히, 복합비료)이 2022년 5,425천 달러에서 2023년 10월 기준 55,738천 달러로 많이 증가하였다. 정책 우선, 기후의 호조건, 밀·보리 재배 면적 증가, 비료 수입 증대, 노동력 및 영농물자 총동원사업 등에 힘입어 올해 식량 총생산은 전년 대비 31만 톤이 증가한 482만 톤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북한의 연간 식량총수요량(FAO&WFP 기준 550만 톤) 대비 여전히 약 68만 톤의 식량이 부족하여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 2024년 전망

제재 장기화에 따른 산업연관 퇴행, 중앙집중적 통제 강화 지속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강화 이후 산업연관의 퇴행이 지속되며 북
 한의 경제구조는 바뀌고 있다. 2022년 북한의 GDP 규모는 2016년
 대비 88.4%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북한당국이 자원배분을 집중하고
 있는 농업, 건설업의 위축은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광업과 제조업은
 2016년 대비 60.7%, 74.3%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특히, 제재로 인
 한 산업용 기기 등 자본재 수입 금지는 제조업의 설비 노후화와 가
 동률 저하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후
 퇴가 지속되는 양상은 1990년대 중반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
 나, 당시와 달리 북한 산업의 주요 중간재인 비료와 원유가 제재와
 무관하게 공급되고 있어 북한 경제가 당장에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그림 VI-4〉 제재 강화 이후 북한의 산업별 실질GDP 변화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 (검색일: 2023.11.30).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급격한 산업의 붕괴보다는 오히려 점진적인 생산축소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24년 북한당국은 제조업의 가동률 저하를 막고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중간재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식료가공·의류가공과 같은 경공업 생산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경공업 생산은 대부분 내수 진작이 목적인 것으로 보이나, 부분적으로 제재를 우회·위반하는 형태로 수출가공 생산을 재개·확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2023년 북한의 대중 수출·수입 1위 품목은 가발, 가수염(HS6704)과 이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HS6703)로 확인된다.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중 수출은 총 2억 4천만 달러 수준으로, 제재 강화에 따른 외화수입 감소를 합법적 수출로 상쇄하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한편, 경제관리의 측면에서도 경제 전반에 대한 중앙집중적 통제를 강화하는 경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당국의 시장 경제활동에 대한 개입은 대외 정치경제적 여건이 악화되는 기간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를 강조하면서 강화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최근의 경향도 이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특히, 소비재 유통과 재정금융 부문에 대한 통제 강화는 제재로 인해 외부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소비재 판매이익과 재정수입을 확대하고 공식 금융제도 내 자금 흡수를 촉진하는 등 내부자금 조달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제재 장기화로 북한당국의 재정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8 2023년 10월 말 기준.

다양한 제재회피 수단 강구, 중·러와의 관계 적극 활용

북한당국은 외화획득을 위해 다양한 제재회피 수단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중국·러시아 협조, 목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2023년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중간보고서에는 북한의 다양한 제재 회피 실태가 담겨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안보리 결의의 상한선을 초과하는 정제유 수입이 불법 환적 등의 형태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뿐만 아니라, 외화 획득을 위한 불법 수출, 암호화폐 탈취, 해외 노동자 파견 사례도 꾸준히 파악되고 있다. 불법적인 것으로 의심되는 석탄, 수산물의 수출 사례가 적발되고 있으며, 2022년에는 17억 달러로 추정되는 암호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파악된다. 자금과 정보를 탈취하기 위한 해커들의 기술은 점점 정교해지고 있으며, 정보기술, 요식업, 의료·건설 분야에서 해외 노동자 파견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국경개방 이후 북한 국적자를 통한 현금과 고가 물품 운반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⁹

북한당국은 제재하에서 대외경제 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제협력 논의도 진전되고 있는 양상이다. 올해 북한의 대중무역은 양국 주요 인사이간 경제·무역 협력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면서 더 확대된 것으로 보인

9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he midterm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assisting the 1718 DPRK Sanctions Committee," <<https://www.securitycouncilreport.org/atf/cf/%7B65BFCF9B-6D27-4E9C-8CD3-CF6E4FF96FF9%7D/N2323869.pdf>> (검색일: 2023.11.30.).

다. 올해 5월 주북한 중국대사와 북한 대외경제상 간 경제·무역 협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데 이어,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행사에는 중국 내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류귀중 국무원 부총리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2018~2019년 관찰되었던 것처럼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관광협력 등의 형태로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이후인 11월 16일 양국 간 최고 경제협력 협의체인 경제공동위원회(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가 4년 만에 개최되었다. 러시아는 북한의 제2위 무역대상국이지만, 그동안 경제적 이해관계가 크지는 않았다. 그러나, 러시아는 식량과 정제유의 수출국이자, 북한 해외 노동자의 주요 파견국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제재하에서 ‘그럭저럭 버티는’ 데 긴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제재 장기화 상황은 중·러의 작은 도움도 북한 경제가 버티어나가는 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촌테제’ 발표 60주년 계기, 김정은 정권의 정책 성과 부각에 집중
2024년 2월이면 김일성의 ‘사회주의농촌테제’ 발표 60주년을 맞는다. ‘농촌테제’를 계승·발전시킨 것이라고 선전한 김정은의 농촌발전전략인 ‘농촌혁명강령’의 정당성을 내세우고 ‘식량 문제’를 해결한 수령의 지위를 획득하고자 2024년에 농업을 최우선의 정책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정권이 제시한 ‘농업발전 5대요소’(종자혁명, 과학농사, 새땅찾기, 저수확지 증산, 당적 지도의 강화)를 중심으로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더 많은 농촌살림집의 건설을 통해 지적

을 부각시킬 것이다.

2024년에는 농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8월 김정은은 북한의 최대 트랙터 및 농기계 생산 기업체인 금성트랙토르공장을 현지지도하면서 12월 하순에 개최될 제8기 제9차 당 전원회의에 농기계발전계획을 제출, 토의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농기계화율의 제고는 해마다 반복되는 영농철 대규모 대중노력동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밀·보리 이모작의 비중 증가에 따른 노동력의 수요를 줄일 수 있으며, 수확 후 손실(FAO 추정에 따르면, 북한의 수확 후 손실량은 곡물총생산량의 20% 수준)을 줄임으로써 증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농기계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군수부문의 비중이 높은 기계공업의 생산조정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및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불안정한 국제 안보 상황과 긴장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제8기 제9차 당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농기계발전계획의 이행은 순조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온실농장 완공 예정과 부식물 다양화 추진

2023년 2월에 착공식을 했던 최대 규모의 강동온실농장이 2024년 2월 ‘농촌테제’ 발표 60주년을 맞는 시점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온실농장이 완공되면 증평온실농장(2019년), 연포온실농장(2022년)에 이어 세 번째이다. 식량자급률 제고가 최우선의 목표였던 농업 생산구조 때문에 북한 주민의 부식물 생산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김정은 정권은 부식물의 다양화를 통해 ‘먹는 문제’ 해법 출구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부식물의 다양화는 알곡 소비를 줄이면서도 칼로리를 높일 수 있는 효과를 낳는다. 다만, 부식물 다양화 정책의 혜택이 핵심 계층에 먼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밀가루를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 및 식품 생산, 온실농장의 생산가 동물 제고를 통한 과·채소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식생활의 다양화를 꾀하는 동시에 지방의 원료를 활용한 식품 산업의 육성·발전을 통해 지방공업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내부자원의 고갈 심화로 대규모 온실농장의 운영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원료 및 자재 공급 차질로 인해 지방 단위의 식품 산업의 발전 역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정책 제언

북한 경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변화 촉구

극단적인 국경봉쇄가 중단되면서, 북한 경제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 제재 위반에 대한 중·러의 묵인이나 협조가 용이해지는 정세도 단기적으로는 ‘그럭저럭 버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강력한 대북 제재 하에서 북한 경제가 성장세로 전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최근 가발, 가수염 등 대체 수출품을 찾으려는 노력을 강구하고는 있으나, 김정은 집권 초기의 수출액을 회복하기는 어렵다. 대북 제재가 강화되기 이전에도 북한의 수출경쟁력이 장기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재하에서 북한이 대량의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대체 수출품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재가 더 오래 지속될 경우, 북한 경제의 성장 동력은 빠르게 소진될 것이다. 북한은 총인구의 규모가 2천5백만에 불과하고, 일인당 소득수준도 천 달러 내외인 저소득국가이다. 제재가 장기화하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은 축소되고 있고, 일인당 소득도 감소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초기 공언했던 ‘경제강국’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중·러의 지원과 협력이 당장의 생존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북한이 저소득국가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해주지는 않는다.

성장을 위한 북한의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기후위기, 식량위기, 인구위기가 중첩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를 홀로 극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북한 경제가 빈곤을 극복하고 성장을 달성하려면 비핵화를 통해 국제사회와 관계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개혁·

개방 정책으로 세계시장에 편입해야 한다.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비핵화 초기 단계에서도 북한의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제안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남북한이 공동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들도 준비하고 있다. 북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북한당국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다양한 인도적 협력, 경제협력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정책변화를 촉구하는 한편, 특히 취약 계층들을 중심으로 인도주의적 위기 신호가 감지되지 않는지 면밀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다.

- 정은미(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최지영(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VII. 북한 인권 실태와 개선 전망



1. 2023년 정세 평가

북한당국의 외부 정보·문화 통제 강화와 인권 침해 심화

북한은 「군중신고법」(2019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청년교양보장법」(2021년)에 이어 2023년 1월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연이어 제정함으로써 외부 정보와 문화의 유입에 대한 통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다. 이 가운데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은 법 위반 시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권 침해가 심화되었다.

한편, 북한은 2021년 「구타행위방지법」 제정에 이어 2023년에는 「장애자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2023.9.26.),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을 개정(2023.8.30.)하여 복수후보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법규 제·개정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그 이유는 첫째, 북한이탈주민 대상 조사 결과 구타행위방지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구타가 많이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증언이 수집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장애자권리보장법 제정 이전에도 「여성권리보장법」(2010년), 「아동권리보장법」(2010년), 「장애자보호법」(2003년)이 제정·시행되었지만 여성·아동·장애인 인권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셋째, 조선노동당 일당 체제하의 복수후보제도는 민주정당제도 하에서 치러지는 자유선거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틈탄 중국의 대규모 탈북민 강제송환 감행
항저우 아시안게임 전후로 중국은 수백 명에 달하는 탈북민을 강
제송환하였다. 이후 국제사회는 이를 규탄하며 강제복송 중지를 촉
구하고 있다. 11월 30일에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
하는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탈북민 송환에 대
한 중국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2023년 9월 13일 유엔 인권최고대
표사무소(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 정부는 “북한
에서 중국으로 경제적 이유로 불법적으로 온 이들은 불법 이주자이
지 난민이 아니다”라며 유엔 난민지위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항
변하였으며, 동시에 “현재 북한에서 고문이나 대규모 인권 침해가
벌어진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라며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탈북민
송환 문제에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와 노력 국내외 확산, 성과는 한계
한국 정부는 2023년 2월 「제4차 남북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
획」을 발표하였다. 기본계획에는 실향민 문제뿐만 아니라 국군포로·
납북자·억류자 문제해결이 중점추진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되어 있
다. 2023년 3월 28일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
한 법률」을 개정하여 추석 전전(前前)날(음력 8월 13일)을 이산가족
의 날로 지정하였고, 2023년 9월 27일 제1회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취임 이후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
설하였고(2023.8.23.), 납북자대책위원회가 11년 만에 개최되었다
(2023.11.14). 2023년 10월 8일 김정옥 선교사 억류 10주년을 계

기로 통일부는 억류자들을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낸 것을 북한당국에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미국은 2022년 12월 23일 「이산가족상봉법(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을 제정하였다. 2022년 11월 개최된 한·미·일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은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고, 2023년 8월 18일 발표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도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우리 정부의 의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문제해결의 시간은 2023년에도 멈추지 않았다. 이산가족의 고령화와 사망자 증가로 문제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은 향후 4~5년으로 전망된다. 2023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이산가족 신청 등록자 133,970명 가운데 생존자는 40,099명, 사망자는 93,871명이다. 생존자 40,099명 가운데 8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65.7%에 달하고 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 6명의 생사 여부와 소재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표 VII-1〉 2016년 이후 이산가족 등록 현황

(단위: 명)

연도	신청자	생존자	사망자
2016	131,143	62,631	68,512
2017	131,344	59,037	72,307
2018	133,208	55,978	77,221
2019	133,370	52,730	80,640
2020	133,406	49,452	83,954
2021	133,619	46,215	87,404
2022	133,675	42,624	91,051
2023.10	133,970	40,099	93,871

출처: 남북이산가족찾기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남북이산가족교류현황,” <<https://reunion.unikorea.go.kr/reuni/home/pds/reqststat/list.do?mid=SM00000129>> (검색일: 2023.12.6.).

〈표 Ⅶ-2〉 등록 이산가족 생존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90세 이상	80~89세	70~79세	60~69세	59세 이하	계
인원수	11,966	14,410	7,465	3,854	2,404	40,099
비율	29.8	35.9	18.6	9.6	6.0	100

주: 2023.10.31. 기준

출처: 위의 자료(검색일: 2023.12.6.).

2. 2024년 전망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가치 연대와 협력 지속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가치연대와 국제협력에 기반한 북한 인권 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 인권 실태 이해 및 공감대 국내외 확산을 위해 2023년 3월 정부 차원에서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 발간한 데 이어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 인권 로드맵을 수립, 2023년 12월 말에는 발표할 예정이다. 2023년 10월 미국은 7년간 공석이던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로 줄리 터너를 임명하였다. 한·미 북한인권협약이 6년 만에 재가동되었고, 2016년 구성된 북한인권현인그룹도 7년 만에 활동을 재개하였다.

가치 연대와 협력을 토대로 하는 북한인권정책 기조는 2024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임명됨에 따라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위한 한·미 간의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12월 제정된 미국의 이산가족상봉법은 재미이산가족의 상봉을 위해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협의할 것,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재미이산가족 대표들과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24년 11월 치러지는 미 대선 결과,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북한 인권의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바이든에 비해 트럼프는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지 않는 등 북한 인권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북한 인권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무게를 둘 경우 북한 인권 문제는 후순위로 밀릴 수

있지만, 하노이 회담 합의 결렬 경험이 있는 트럼프가 북한에 거는 기대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 계기, 책임규명 강조하는 활동 많아질 것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는 2014년 2월 북한에서 반인도범죄가 자행되어 왔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후 매년 채택되고 있는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결의,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책임규명 독립전문가그룹 등의 활동을 통해 책임규명(accountability)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지속되고 있다. 2022년 8월 제4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엘리자베스 살몬은 임명 이후 첫 번째로 제출한 북한인권상황 보고서에서 책임규명 활동을 수행할 것임을 밝혔다.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로 공식 임명된 줄리 터너 역시 북한 인권 침해 책임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을 거듭 천명하였다. 2023년 2월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계기로 책임규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활동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사회의 책임규명 활동이 강조·강화될 경우 북한의 대응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COI 보고서 발표 이후 북한은 인권은 국권(國權)이라는 논리로 대응하며 반발하여 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북한은 자주권과 연계하여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 특히 최고지도자에 대한 책임규명을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 제도전복 시도, 북한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며 반발하는 양상을 지속적으로 보여왔다. 연장선상에서 조선인권연구협회는 2023년 12월 9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줄리 터너의) 탈북민 문제 제기, 정보유입 확대, 책임규명 강화는 북한을 악마화하고 내부에 심리적 불안정과 불만을 조성하여 궁극에는 제도전복, 정권붕괴의 기초를 닦아보려는 침략적 기도의 발현이라고 주장하였다.¹⁰ 이어 조선인권연구협회는 2023년 12월 11일 발표한 『조선인권연구협회 백서』에서 국가의 자주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 인권은 한갓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인권을 국권과 연계하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인권제재를 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을 비판하였다.

책임규명과 관련, 2016년 3월 3일 제정된 한국의 「북한인권법」은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수집·기록한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이관하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관련 자료를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 인권 침해 조사·기록 이원화 체제는 책임규명 측면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책임규명이 강조되면서 이 문제가 쟁점 가운데 하나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이원화 체제에 따르는 운영의 묘를 살리는 가운데 책임규명 측면에서 북한 인권 침해 조사·기록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외부 정보 유입에 대한 북한의 통제 강화…전단살포 논란 재점화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개선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북한 내 정보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같은 기초와 관련 활동은 2024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상응하여 외부 정보와 문화 유입

10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담화, 2023.12.9.

에 대한 북한의 통제와 처벌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는 가운데 북한은 사상통제와 정보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법제 정비(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의 개정 또는 신규 법규 제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대북전단살포 금지·처벌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23년 9월 26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적인 정당성을 부여받은 북한인권단체의 전단살포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상응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평화(권)을 위해 전단살포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주장을 남북관계발전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의 문제가 2024년도 남북관계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과 탈북시도 북한 주민에 대한 무기 사용 가능성

항저우 아시안게임 전후 중국이 대규모 탈북민을 강제북송한 데 이어 추가 강제북송의 가능성도 있다. 북한인권단체들은 현재 중국 교도소에 1,000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이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유엔, 미국 등 개별 국가, 국내·외 시민단체 등)와 협력하여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중국이 유엔 난민지위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이 탈북민 송환 문제에 적용되지 않는 점을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이에 대응한 논리개발과 증거제시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중국 당

국에 탈북민들을 제3국에 추방하도록 요구하고, 헌법 제3조에 입각하여 추방된 탈북민은 전원 국내 수용한다는 방침을 천명하여야 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경봉쇄로 급감하였던 탈북민 수가 점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자유를 찾아 국경을 넘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중국 경찰이나 군인에 의한 무기 사용이 우려된다. 중국이 2021년 10월 23일 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육지국가경계법(中人民共和國陆地界法)」 제38조는 “어떠한 누구도 불법적으로 월경하는 것을 금지한다. … 불법 월경자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체포를 거부하거나 기타 폭력을 행사하여 타인의 신변과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법 집행 요원은 법에 따라 경찰 장비 및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당국에 의한 무기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3. 정책 제언

인권외교 지역적 범위 확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 및 협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인권외교를 확대하여야 한다. 유엔 중심의 다자외교와 미국 중심의 양자외교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유럽지역(유럽연합, 영국)으로 인권외교의 지역적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민·관, 국책연구기관의 협력 강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연구원은 2024년 10월 24일 영국 의회의 '북한에 대한 초당파 의원모임(APPG-NK)'과 공동개최한 2024 유럽북한인권포럼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중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였고, 이는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의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으로 이어졌다.

인권외교 범주 확대 및 역량 강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해외 탈북민 문제에서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 문제로 인권외교의 범주를 확대하여야 한다. 그 일환으로 2024년 11월 예정된 북한에 대한 제4차 국가별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2014년 제2차 북한 UPR의 경우 오직 한국만이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북한에 촉구하였을 뿐이다.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이익보호규제도 활용 방안도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 국민들을 상대로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 문제의 실태를 알리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인권외교 확대를 위해서는 통일부 외에 외교부의 역량이 확충되어야 한다. 현재 외교부의 조직과 인원으로서는 북한 인권 개선에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인도적 협력을 위한 남북대화

이산가족(실향민,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정책을 지속하는 가운데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인도적 분야에서의 대화와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재해·재난, 기후변화·기후위기, 감염병 등 인권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신안보 문제는 국경을 초월하여 남한과 남한 주민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남북 양자 차원의 대화 천명 외에 북한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매개로 하는 다자대화의 모색도 필요하다.

- 이규창(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

VIII. 남북관계 정상화 가능성



1. 2023년 정세 평가

북한의 남북관계 단절 전략

2022년 정전협정일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비난 연설 이후 북한은 대남 적대시 정책을 강화했으며, 금년에도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2월 담화를 통해 여전히 남한을 상대할 의향이 없다고 강조했으며, 이후 남북관계가 아닌 주로 대미 또는 국제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한국의 현 정부와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남북관계 형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북한은 대남 강경책을 견지하며,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데 주력하는 양상을 보였다.

올해 7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기존의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이후 북한 매체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 북한의 《대한민국》 표현은 2국가 체제를 지향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북한이 대한민국을 표현할 때 ‘궤화살괄호’(《》)를 사용함으로써 강조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으며, ‘역도’, ‘괴뢰지역’, ‘조국통일’ 등의 용어를 병행해 한국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한민국》 표현 사용은 적대적 남북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핵 지렛대 대남전략’

북한은 2월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을 개최하고 화성-17형 11기, 고체연료 화성-18형 5기 이상을 선보였다. 화성-17형은

지난해 열병식에서 4기가 등장했다는 점에서 1년 만에 크게 증가했다. 북한은 4월 13일에는 화성-18형을 첫 시험 발사해 ICBM 신속 발사 능력을 과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곧 보면 알게 될 일”이라며 예고했던 ICBM 정상 각도 발사는 올해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북한이 아직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반면 올해 북한의 전술핵 분야의 위협이 심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대남 핵 위협을 본격화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우위를 도모하는 ‘핵 지렛대 대남전략’을 구사하는 양상을 보였다. 8월 29일 김정은 위원장은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실드(Ulchi Freedom Shield: UFS)에 대한 맞대응 성격의 전군 지휘 훈련을 참관했다. 인민군 전군 지휘 훈련은 공격의 격퇴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반격 및 남한 전 지역을 점령하는 것으로, 북한이 전군 지휘 훈련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은 2023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기를 헌법에 명문화하고, 전술핵공격잠수함을 진수시킴으로써 비핵화 의지가 없음을 명백히했다.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핵 어뢰 ‘해일’, 전략 순항미사일 ‘화살’ 등 핵무기로 한국의 주요 시설을 모의 공격하는 훈련을 실시·공개함으로써 압박 강도를 높이는 양상을 보였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재래식 전력 차이를 극복하는 실리주의 전략을 구사했으나, 한국 정부의 1조 3항 효력정지에 대응해 중단된 군사활동 복구를 선언했다.

북한의 신냉전 대남전략

북한은 대남, 대미관계 교착과 대북 제재의 고립국면 돌파를 위해 신냉전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이를 대남전략에 반영하고 있다. 북한은 중·러·북 관계와 반미 연대 강화를 남북관계 교착으로 인한 고비용구조에 대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중·북관계에 더해 러시아를 새로운 돌파구로 활용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22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현 국제정세를 신냉전·다극화 구도로 규정했으며, 올해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전 지구적 범위의 신냉전구도의 현실화를 재차 강조하고 반미, 반서방 연대 강화를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9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전면적 관계 발전에 합의했으며, 이를 계기로 군사협력을 가속화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0월 13일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천여 개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하여 우크라이나 전선 인근으로 이동했다고 확인했으며, 국정원은 포탄 100만 발 이상으로 추정했다. 11월 중순 현재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지원은 컨테이너 3천 개 규모로 추정된다. 러시아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 에너지, 비료의 주요 수출국이며 첨단 군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러·북 간 군사협력으로 고립된 북한은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대남 강경책의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원칙적 대북정책의 대응

북한의 핵 위협 고조에 대해 정부는 자주적 대응능력 강화와 함께 ‘워싱턴 선언’을 통한 확장억제의 제도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한 다자 협력구도 형성 등 북핵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했다. 정부는 북한의 대남 강경책에 대해 남북관계 정상화를 지향하는 원칙적 대북정책을 견지했다. 정부는 단기적 성과도출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형성을 위해 기존의 잘못된 관행의 교정에 주력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확고한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인권 문제의 이슈화 및 국제사회와 협력 강화 등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남북관계 형성을 지향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2023년 전반적으로 북한은 핵 위협 고조와 함께 대남 강경책을 견지했으며, 정부는 원칙적 대북정책으로 대응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돌파구는 마련되지 않았다.

2. 2024년 전망

남북관계 교착국면 지속

남북관계 교착국면은 남북한의 입장 차와 미·중 전략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사태 등 국제 정세의 영향이 반영된 복합적 요인의 결과라는 점에서 단기적 돌파구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은 향후에도 핵 능력 고도화와 대남 강경책 지속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정상화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입각한 통일방안의 구현을 위한 원칙적 대북정책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에도 한반도 긴장과 아울러 남북관계 교착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신냉전전략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선포한 미국과의 장기전 및 정면돌파전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은 2024년에도 신냉전전략에 기반을 둔 대남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에도 북핵 위협의 지속적 증대로 인한 한·미동맹 차원의 대응 및 한·미·일 협력구도 강화가 예상되며, 북한 역시 중·러·북, 반미국가와의 연대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신냉전전략이 강화될수록 남북관계의 여지는 축소될 개연성이 있다.

북한 체제 위기 심화

남북관계 교착 및 북한의 대남, 대미 강경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체제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경제위기와 식량난은 김정은 정권기 최악이며, 북한 역사상으로도 가장 어려운 상황이다. 러·

북관계의 경우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소강상태로 접어들 경우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북한은 탄약과 노동력 공급처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신동방정책의 성사를 위해 러시아는 한국, 일본, 아세안 국가와의 관계개선이 필요하며, 북한은 통과구간의 의미를 넘기 어렵다. 러시아는 식량과 에너지 등을 제외한 산업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러·북관계는 북한 경제 회생에 제약이 있다. 국내 경제문제로 미국과 갈등을 완화하고 있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시선을 외면하고 북한을 적극 지원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남북 및 미·북관계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대남, 대미 관계개선 필요성은 향후에도 상존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사적 긴장 조성과 전략적 도발의 수위 조절

2024년 북한은 핵 능력 고도화 및 국방력 강화 지속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되 고강도의 전략적 도발의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11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정지를 결정하자 북한은 더 이상 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며 중지된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재래식 전력에서 열세인 북한이 주체가 분명하고 원점이 확인되는 명시적 도발을 감행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것이다. 고강도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될 경우 체제 내구력이 취약한 북한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도

발에 대해 우리 측이 강력한 대응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4년에도 러·북 군사협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군사적 도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시선 집중은 북한은 물론 러시아에도 부담이 된다. 2024년 북한은 국방력 강화를 위한 예정된 일정을 소화할 것이나, 불필요한 고강도의 전략적 도발은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한반도 긴장조성과 남북관계 주도권 확보를 위해 주체와 원점이 불분명하고 한국군의 대응이 어려운 복합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한·미 국내 정세 영향

2024년 한국 총선 및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남북관계가 일정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외정책 노선에 차이가 있으며, 대북정책 분야에서도 양당의 차이가 뚜렷하다. 바이든 정부는 동맹 강화 및 민주주의 진영 간 네트워크 강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들 모두 대외정책에서 미국의 개입 축소와 당사국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될 경우 다시 한번 톱다운(top down) 방식을 통한 대북 드라이브에 주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핵문제가 이미 임계점을 넘었으며, 유럽과 중동 등 국제정세가 복합적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정권기 하노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과 같은 상황이 재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2024 한국 총선 결과에 따라 대북정책 환경에 일정한 영향의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여야의 대북정책 차이에도 불구하고 2018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당시와 달리 현재 국내외 정세가 변화했다는 점에서 대북정책의 파격적인 전환은 쉬운 과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대한민국을 향한 핵 위협의 고조와 아울러 북한문제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가중되었다는 점에서 대북인식도 단기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3. 정책 제언

남북관계의 전략적 명확성 견지

역대 한국 정부는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며 선의에 기반을 둔 전략적 인내를 견지했지만 성과도출에는 한계를 보였다. 향후 남북관계 발전은 목표와 지향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불가역적 신뢰를 형성하는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의 불가피성을 북한에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 발전은 한반도의 자유, 인권, 평화가 실현되는 통일 로드맵의 일환이라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북한에 이와 같은 메시지를 분명하게 각인시키는 일이다. 진정성 없는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 본연의 목표에 부합할 경우 과감하고 파격적인 정책을 추진하되, 북한의 악용 의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교류와 안보의 균형

동·서독의 경우는 접촉을 통한 변화의 성공적 사례라고 할 수 있으나 한반도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동·서독 관계개선은 소련 및 동유럽 공산권 해체라는 안보적 위기가 해소되는 배경을 통해 이루어졌다. 반면 동아시아의 경우 냉전체제의 해체가 미·중 전략경쟁으로 확대·재생산되었으며, 북한은 핵 개발을 가속화해 안보위기를 고조시켰다. 유럽과 상이한 안보적 상황에서 진전된 남북관계의 양적 발전은 구조적 불안정성을 내재했다.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은 교류와 안보의 균형 속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북핵 및 안보적 위기 해소, 군사적 신뢰구축의 진전과 연계된 남북관계의 단계적 확대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핵 위협이 임계점을 넘었다는 점에서 북한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의 본격화가 연동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 교정

단기적 성과도출이 아닌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의 형성을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의 교정이 필요하다. 북한이 갑이 되는 일방적 남북관계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보상의 관행이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차원의 남북합의는 북한의 일방적 행위로 이미 파기되거나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이같은 북한의 행위가 방지될 경우 남북의 당국 및 민간 간 새로운 합의는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동안 한반도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진전이라는 명분의 대승적 차원에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묵인 내지 방조의 경향이 일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신들의 전략적 이해관계 관철에 악용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확고한 원칙과 행동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남북관계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 무한책임론, ‘한반도선언’ 검토

헌법상 북한의 전 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북한 주민은 잠재적인 우리 국민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고통 경감을 위한 노력은

우리 정부의 권리이자 의무에 해당한다.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을 위한 중장기적 노력과 함께 북한 주민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김정은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는 투 트랙(two tracks)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도록 견인하는 원칙적인 대북정책과 병행해 북한 주민의 고통 경감을 위한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도주의 무한책임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 ‘한반도선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투명성을 전제로 식량, 보건의료, 취약계층 등 북한 주민에 대한 조건 없는 포괄적 지원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선언’을 북한당국이 거부해도 북한 주민에게 우리의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경제난 속에서도 핵과 국방력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선언’은 그 자체로 우리의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북한 변화 견인

중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이 긍정적 변화를 견인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3대 세습의 장기독재와 강력한 통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볼 때, 체제 내적 변화의 동인이 형성되기 어려운 구조다.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서는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체제 내 변화를 위한 맹아를 형성하는 일이며, 북한 주민 스스로 당면한 문제의 해결과 긍정적 미래를 향한

의지를 결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객관적 정보와 진실은 핵심적으로 중요했다는 교훈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민주화와 자유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정확한 정보와 진실을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 군사적 충돌과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에 부정적 요인을 초래하는 과도한 표현의 자유는 지양될 필요가 있다. 북한 내 긍정적 변화는 한반도 평화와 중장기적 통일로드맵의 구현에 있어 결정적이라는 점에서 객관적 정보와 진실을 전달하는 노력은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및 효과적인 협력체제가 가동되어야 할 것이다.

- 조한범(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보고서

2021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21-01 남북 민생협력의 효율적 추진방안: 추진체계, 사업기획 및 성과관리	김석진 · 홍제환
2021-02 북한의 사회불평등 연구: 건강 및 교육 불평등과 인권	최규빈 외
2021-03 국가상징의 문화적 형상과 북한의 브랜드 전략	이지순 외
2021-04 남북 지식협력: 현황 및 추진방향	김수암 외
2021-05 유네스코 공동등재를 활용한 남북 문화유산협력	이우태 외
2021-06 미국의 평화정책과 전망: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한미관계	민태은 외
2021-07 평화 · 통일 공공외교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의 역할과 개선방안: 주변 4국을 중심으로	전병근 외
2021-08 동아시아 평화 · 번영을 위한 비전통 안보 협력	이재영 외
2021-09 국제협력 성패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 연구	정성윤
2021-10 북한의 정보화와 주민생활 변화	정은미 외
2021-11 김정은 지배체제 구축과 권력 안정화	오경섭 외
2021-12 김정은 정권의 핵 외교와 대외정책 변화	김진하 외
2021-13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경제정책, 대외무역, 주민생활	홍제환 · 김석진
2021-14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정책: 복지과 통제를 중심으로	정은미 외
2021-15 KINU 통일인식조사 2021: 통일 · 북한 인식의 새로운 접근	이상신 외
2021-16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의 SDGs 소개와 지표분석	황수환 외
2021-17 남북 재해재난 공동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추진방향	나용우 외
2021-18 남북 접경지역 재해 · 재난 대응력 제고를 위한 '방재전이공간(TSDP)' 조성방안 기본 연구	김형수 외
2021-19 북한의 성 · 재생산 건강과 권리 I: 여성과 섹슈얼리티	박영자 외
2021-20 북한의 성 · 재생산 건강과 권리 II: 모성과 양육	이윤진 외
2021-21 평화의 인권 · 발전 효과와 한반도	서보혁 외
2021-22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대응: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	신중호 외
2021-23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주변국 협력 방안	이기태 외

2021-24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일본의 대한민국 협력 방안	최희식 외
2021-25 세계질서의 재편과 신한반도체제	박은주 외
2021-26 북한발전모델과 한반도 컨센서스	이재영 외
2021-27 한반도 군비경쟁과 평화정책	장철운 외
2021-28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협력 방향 모색	최지영 외
2021-29 북한 일상생활 공동체의 변화	최지영 외
2021-30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김갑식 외
2021-31-01 평화공감대 확산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박주화 외
2021-31-02 2021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2021-32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이무철 외
2021-33 한반도 신경제구상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정은이 외
2021-34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조한범 외

〈정책연구시리즈〉

2021-01 2020년 미 대선 이후 한미관계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	이상신 외
2021-02 북한의 효과적인 SDGs 이행을 위한 공간전략 탐색: 접경지역 산림특구안을 중심으로	황진태·백일순
2021-03 한중 보건 협력과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활성화 방안	황태연
2021-04 통일공공외교 수요조사	이상신·이재원

〈Study Series〉

2021-01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Suk-Jin Kim
2021-02 North Korea's Income-Population Puzzle	Jea Hwan Hong · Suk-Jin Kim
2021-03 North Korea's College and University and Higher Education System in an 'Era of Knowledge Economy'	Jeong-ah Cho · Choon Geun Lee · Hyun-suk Oum
2021-04 A Study on the Access to In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People	Soo-Am Kim et al.

2022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22-01 기후변화와 북한인권: 실태 및 협력방안 -SDGs 매개의 남북인권협력 관점에서-	이규창 외
2022-02 북한 국영기업 현대화를 위한 남북협력 방안	김석진 · 홍제환

2022-03 북한 게임의 문화융합: 게임산업, 콘텐츠, 경험	이지순 · 최선경
2022-04 북한의 SDGs 이행 현황 및 지표 분석	최규민 외
2022-05 해외사례를 통해 본 남북 접경협력의 추진 방향과 전략	나용우 외
2022-06 2022 접경지역주민 인식조사	나용우 · 이우태
2022-07 남북 지역교류 활성화 방안: 북한의 새로운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정은이 · 이해정
2022-08 북한의 중산층	정은미 외
2022-09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정책: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민태은 · 박동준
2022-10 북한의 코로나19 대응과 국제사회의 대북협력	황수환 · 권재범
2022-11 체제전환국 국가 · 종교 관계와 북한에 대한 함의	현승수 외
2022-12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전략	조한범 외
2022-13 한반도 외교안보 환경 변화와 평화 · 비핵 체제 모색	김상기 외
2022-14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남북관계 인식과 협력 모색	이무철 외
2022-15 포스트-코로나 시대 동북아 군비경쟁과 한반도 안보 협력	장철운 외
2022-16 북핵 도전요인과 국제협력	정성윤 외
2022-17 비핵화 합의와 이행의 법 · 제도적 문제: 주요 비핵화 사례를 중심으로	도경옥 외
2022-18 시진핑 시대 중국의 핵심이익과 한반도 평화 · 번영	이재영 외
2022-19 발전의 평화 · 인권 효과와 한반도	서보혁 외
2022-20 KINU 통일외식조사 2022	박주하 외
2022-21 팬데믹 시대 정책 환경 변화와 북한의 대응	황진태 외
2022-22 동북아 정세 변화와 북한의 전략적 선택: 미중 경쟁구도의 전개와 북한의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김진하 외
2022-23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재정금융 제도 변화	최지영 외
2022-24 북한의 전략국가론과 핵무기 고도화	홍 민
2022-25 북한 미래세대를 위한 개발협력 구상: 해외 사례와 시사점	홍제환 외
2022-26 미중 전략경쟁시대 한국의 복합대응전략	김갑식 외
2022-27 북한 주민의 생활세계(life-world): 이론과 방법론	박영자 외
2022-28 2022 북한 공식시장 현황	홍 민 외

<정책연구시리즈>

2022-01 중국 20차 당대회 분석과 한반도에 주는 함의	전병곤 외
2022-02 동아시아 다중 안보 위기 속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이 가지는 의미	박은주
2022-03 2022년 미국 중간선거와 정당별 정책 전망	민태은 외
2022-04 윤석열 정부의 통일 · 대북정책: 국정과제 추진방향	한동호 외
2022-05 북한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론과 대북안전보장 방안	홍 민 외

〈Study Series〉

- 2022-01 An Assessment of the Last Decade of the Kim Jong-un Regime
Hyeong-Jung Park et al.
- 2022-02 The Cultural Meaning of North Korea's National Symbols and Its Branding Strategy
Ji Sun Yee et al.
- 2022-03 The Restructuring of the World Order and a New Korean Peninsula System
Eun Joo Park et al.
- 2022-04 The Arms Race and Pea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Cheol-wun Jang et al.
- 2022-05 Exploring Inter-Korean Cooperation for the Formation of a Life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Ji Young Choi et al.

2023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 2023-01 김정은 정권의 도시공간 재편전략: 진지전 도시화의 관점에서
황진태
- 2023-02 국제기구의 국가진단 방법을 통해 본 북한 경제발전 전망과 과제
김석진
- 2023-03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와 한반도
서보혁 외
- 2023-04 북한 휴대전화 보급이 주민 삶의 질에 미친 영향 분석: 취약계층의 소득증대를 중심으로
정은이·이해정
- 2023-05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비전과 남북관계 운영전략
김갑식 외
- 2023-06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
장철운 외
- 2023-07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을 위한 SDGs 협력 방안
조한범 외
- 2023-08 남북 그린데탕트를 통한 한반도 기후·환경공동체 구축 방안
이무철 외
- 2023-09 한반도 비핵·평화·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방안
현승수 외
- 2023-10 KINU 통일외식조사 2023
이상신 외
- 2023-11 접경에서 시작하는 남북 그린데탕트 실현 방안
나용우 외
- 2023-12 2023 접경지역 남북협력 인식조사
나용우·이우태
- 2023-13 북한의 SDGs 이행을 위한 역량 접근과 공동 성과
최규빈 외
- 2023-14 김정은 시대 뉴미디어 대외선전 실태와 전략
이지순 외
- 2023-15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과 중러북 경제관계 변화 대응 전략
이재영 외
- 2023-16 북한 핵보유 협상전략: 이해와 전망
정성윤·김민성
- 2023-17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소비재 생산과 유통 실태
최지영 외
- 2023-18 김정은 정권의 농촌발전전략
정은미·박희진

2023-19	김정은 시대 북한의 청년들: 순응과 자립 사이, 국가와 시장을 횡단하기	조정아 외
2023-20	북한 주민의 직장 생활	박형중 외
2023-21	북한 주민의 학교 생활: '인민'의 재생산과 학교 일상의 수행성	조정아 외
2023-22	북한 주민의 가정 생활: 국가의 기획과 국가로부터 독립	박영자 외
2023-23	일본 기시다 정부의 대외전략	이기태 외
2023-24	미국의 경제 제재 정책: 2차 제재 방식을 중심으로	황수환 외
2023-25	중국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정책	황태연 외
2023-26	북한의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계획: 전략적 의도와 추진체계	홍민 외
2023-27	평양의 도시정치와 공간구조	홍민 외

〈정책연구시리즈〉

2023-01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전방향: 자유·평화·번영의 한반도 통일방안	오경섭 외
2023-02	담대한 구상의 여건 조성 방향	정성윤 외
2023-03	남북 체제비교와 성과 연구: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동호 외
2023-04	중·러·북 연대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전략	이재영 외

〈Study Series〉

2023-01	The Changes in North Korea's Fiscal and Financial System in the Kim Jong-Un Era	Ji Young Choi et al.
2023-02	North Korea's Response to Its COVID-19 Outbreak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Support to North Korea	SooHwan Hwang et al.
2023-03	The Challenges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ung-Yoon Chung et al.
2023-04	North Korea's Official Markets in 2022	Min Hong et al.
2023-05	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y of the Yoon Suk Yeol Administration: Implementing Government Tasks	Dong-ho Han

KINU Insight

2021-01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	홍민 외
2021-02	김정은 시대 주요 전략·정책용어 분석	홍민 외
2021-03	2014~2020년 북한시장의 소비자물가 및 환율 변동: 추세, 특징, 시사점	최지영
2022-01	김정은 시대의 북한: 10년 평가와 2022년도 전망	홍제환 외
2022-02	2022 북한 도전요인 전문가 인식조사	정성윤 외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21	오경섭 외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1	오경섭 외
북한인권백서 2022	이우태 외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2	이우태 외
북한인권백서 2023	이우태 외

연례정세보고서

2021	2022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22	2023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23	2024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정기간행물

통일정책연구, 제30권 1호 (2021)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30, No. 1 (2021)	
통일정책연구, 제30권 2호 (2021)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30, No. 2 (2021)	
통일정책연구, 제31권 1호 (2022)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31, No. 1 (2022)	
통일정책연구, 제31권 2호 (2022)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31, No. 2 (2022)	
통일정책연구, 제32권 1호 (2023)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32, No. 1 (2023)	
통일정책연구, 제32권 2호 (2023)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32, No. 2 (2023)	

기타

2021	국제 평화문서 번역집	서보혁 · 용혜민 엮음
2022	2022 KINU 북한도시포럼 발표집: 「육망의 모노리스,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도시변화」	홍 민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s://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한반도 정세 전망

www.kinu.or.kr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